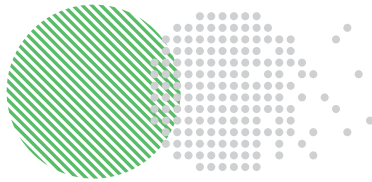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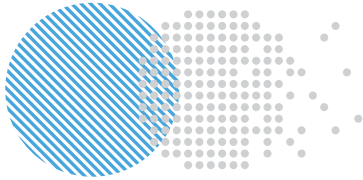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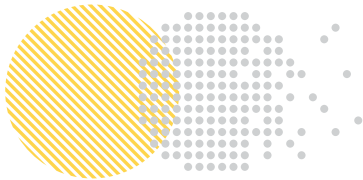
연구보고25-연적금 03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최용환 · 임지연 · 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

연구보고25-연적금03

---

#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저 자 최용환, 임지연, 좌동훈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용환(청년정책연구본부)  
공동연구원\_임지연(통계·패널연구본부)  
\_좌동훈(청년정책연구본부)



## 보고서를 펴내며

본 연구는 기존에 추진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산업별로 종합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획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이 시도의 활력과 신성장 동력마련,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에 대한 개선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 단순한 고용유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용에 대한 2차 통계자료, 각 시도의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용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output)와 효과성(outcome)을 정성적 분석하였다.

그리고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 이어, 청년정책 및 정책의 전문가 응답 수 및 표본 수 총 528개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중요성과 성과도, 산업별 효과성, 미래산업 파급력을 조사하여 향후 전략수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한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에 추진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산업별로 종합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획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이 시도의 활력과 신성장 동력마련,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에 대한 개선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용에 대한 2차 통계자료, 각 시도의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용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output)와 효과성(outcome)을 정성적 분석함. 청년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 단순한 고용유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청년고용창출 정책의 목표달성을 수준의 성과(output)보다 지역사회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정책효과성(outcome)을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이와 같은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 이어, 청년정책 및 정책의 전문가 응답 수 및 표본 수 총 528개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중요성과 성과도, 산업별 효과성, 미래산업 파급력을 조사하여 향후 전략수립을 제언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시도별 청년고용 통계조사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를 위한 국내외 문헌 조사를 실시함.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와 고용행정통계(<https://eis.work24.go.kr>)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시도별 청년고용 현황을 진단함. 이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 광역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지표를 개발함. 구체적으로 분석지표는 정책의 달성도 외에도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문헌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분석 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사이트에 게시된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분석 내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는 분석기준에 따라 광역시도의 청년고용정책 효과성이며, 서면평가형식으로 정책평가를 수행하였음. 시기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임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 앞선 광역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에 이어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미래산업 전략수립 연구를 위하여 ‘지역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미래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조사의 모집단은 청년고용 및 청년정책관련 실무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이며, 표집틀은 청년정책, 청년전문사업 종사자 및 활동가, 경제학, 정책학,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임. 조사는 온라인 웹조사로 위탁조사업체를 통해 추진하며, 조사표집은 약 1개월 간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함.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700여 명 중 전문가조사’의 응답자는 총 376명임. 그리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2차 신속심의에 제출된 조사 설계에 따라 거주지역에 기반한 1차조사 이후 17개 시도가 30개 표본이 미만한 지역은 응답가능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에 입각하여 30개의 응답 수 표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응답 수 표본은 총 528개임. 또한 해당 조사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되었음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문헌연구결과, 지역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는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다수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주력산업 육성 부재를 지적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
- 2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 및 고용행정 통계분석과 청년고용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종사자와 채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 청년을 포함한 성별 종사유형의 경우 대체로 자영업이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지만 무급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음. 그리고 청년고용의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 월 급여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고 울산과 경기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사업장 및 구인·구직·취업 현황, 지역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등의 지급 현황, 지역별 실업자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 등은 전체 청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의 현황이 다른 지역보다 큰 차이로 높은 편임. 또한,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근로인등의 현황은 경기도가 가장 높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이는 일반 고용 현황은 물론이고 청년고용환경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성별 고용 기회의 구조적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나아가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나 활성화도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환경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 창출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 구체적인 분야별 효과 분석은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형성 35점', '정책집행 25점', '정책성과 40점'으로 구분되었음. 평가위원은 행정, 정책, 법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평가위원 3명을 선정하였음

## 주요 연구결과

-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결과, 서울은 정책형성 단계에서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청년 고용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홍보와 사업 관리의 충실성,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는 점이 강점으로 분석됨. 그러나 청년·지역·대학·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와 효과 검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됨. 부산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고용환경 및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의 충실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단, 기존의 환경분석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인천은 청년 인구 현황과 지역 고용 관련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의 정당성 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이 정량적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대구는 지역 청년고용 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립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청년들의 실제 고용성과와 체감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은 청년, 지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에 기초한 기획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에서 결과 중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역 규모와 역량에 기반한 차별적 전략 수립이 미흡한 점으로 분석되었음. 이어 광주와 전남은 지역 청년 현황 및 산업·경제 여건을 분석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구체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문제를 반영한 차별적 전략이 미흡하여 향후에는 지역 기반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연구결과

- 울산은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개별 프로그램 추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니터링이 일회성에 그쳐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 그리고 세종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성과목표치와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협업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역 특성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대학·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 유관기관 협조체계의 구축, 현황자료와 환경분석 등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경기도 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양성이 큰 만큼, 차별적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청년고용 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은 지리적·산업적 특성과 정책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이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리고 충북은 지역 자원과 협력체제의 활용, 기업과 대학의 참여 의지를 기반으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성과 관리가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고,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과 질적 성과평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음. 충남은 지역의 산업 환경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성과 달성의 가능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 고유의 산업·고용 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설정과 이해관계의 맥락에 대한 검토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북은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구성 노력 등은 긍정적이나, 지역적 특성과 교육기관의 특성화 등에 기초한 차별적 전략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산출 근거의 미흡, 의견수렴 결과의 실질적 반영수준이 낮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 주요 연구결과

- 전남은 사업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협업과 의견수렴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와 지표 간 연계성과 정성적 평가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경북은 청년고용 문제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 수준이 미흡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과 합리적 산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은 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 의지와 청년고용 문제의 중요성 인식이 정책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청년고용과 관련한 지역 동향 및 데이터 분석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유관 기관 간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과 협업의 지속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제주는 지역 동향과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한 전략 마련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구체성과 질적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됨
- 다음은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한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임
- 먼저, 서울은 지식기반 산업과 첨단 서비스업이 집중된 도시로 높은 교육·보육 수준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과 창업·고용 진입장벽이 청년층의 정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 지원, 창업·R&D 연계 프로그램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부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있어 지식기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 등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이 청년 유입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문화·복지 인프라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대구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보다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청년 기술인력 양성, 직무 맞춤형 훈련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청년층의 정주를 위해 주거부담 완화, 지식기반 제조업·서비스업 전환과 근무환경 개선, 교통 및 보육 인프라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후 산업환경의 스마트화,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은 청년의 지역 정착 의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광주시는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자동차·에너지·AI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산업별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창출을 위한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친화경영 환경 조성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는 공공연구기관과 첨단산업 중심의 R&D 도시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설정되어야 함. 따라서 대전시는 연구개발 기반의 청년 인재양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협력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및 인식개선 등을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친환경·스마트 제조산업으로 전환 중인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기업지원정책 또한 미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수립·운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기업 인식 제고,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훈련체계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R&D 중심의 청년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고용의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도시로서 청년고용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이에 따라 청년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제도적 지원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연구결과

- 경기도는 첨단산업·제조업·지식서비스 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며 일자리의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단,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일자리 질적 불균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 인식 제고, 산업 현장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문화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강원은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하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함
- 충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청년 기술인력 유입이 요구됨. 그러나 이러한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실제로 지역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환경 조성 보완이 요구됨.
- 충남은 전통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 속에서 첨단소재, 반도체, 수소산업 등으로 산업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인식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제고와 고용서비스의 내실화는 기술인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음
- 전북은 농생명,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역의 청년고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 강화, 인건비 보조제도의 내실화가 병행되어야함

## 주요 연구결과

- 전남은 전통적인 중화학, 농생명 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 위에, 최근 해상풍력, 수소 등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도모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정책을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 근속과 기술인력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경북은 철강, 기계, 반도체, 전자산업 등 제조 기반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산업(원전 및 수소)으로 신산업을 육성 중임. 이에 따라 경북의 청년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은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 기반 맞춤형 직무훈련 강화, 청년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은 기계·조선·항공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며 미래 모빌리티, 방산,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 청년층의 정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고도화, 생활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R&D 중심 청년 창업 및 기술 일자리 창출 확대, 광역 교통망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여가 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주는 관광·서비스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아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여건이 제한적임. 따라서 향후 기업지원정책은 관광·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고용서비스 체계 강화 및 산업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 내 중소기업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중심의 단기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청년고용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해야함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연구보고25-연적금0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방법 ..... 4

## II.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 9
- 2.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 12

## III.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 및 고용행정 통계분석과

### 청년고용 환경

- 1.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통계 분석 ..... 19
- 2. 시도별 지역 고용행정통계 분석 ..... 23
- 3. 지역별 청년고용환경 및 시사점 ..... 28

## IV.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지표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 31

**V.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정책분석 결과 .. 43**

**VI.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1.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 81
2. AHP 조사결과 ..... 83
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제언 ..... 89

**참고문헌 ..... 163**

## 표 목차

표 Ⅲ-1. 지역별 고용현황 .....	20
표 Ⅲ-2. 성별 종사자 현황 .....	21
표 Ⅲ-3. 지역별 근로 여건 현황 .....	22
표 Ⅲ-4. 지역별 사업장 및 구인·구직·취업 현황 .....	23
표 Ⅲ-5. 지역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지급자 현황(2024년 기준) ..	24
표 Ⅲ-6. 지역별 실업자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 .....	26
표 Ⅲ-7. 지역별 외국인고용 현황(2024년 4분기 기준) .....	27
표 Ⅳ-1. 지역청년고용정책의 효과분석 지표 .....	32
표 Ⅳ-2. 평가위원 배경 특성 .....	42
표 Ⅴ-1. 평가결과 .....	45
표 Ⅴ-2. 평가결과(서울) .....	54
표 Ⅴ-3. 평가결과(부산) .....	56
표 Ⅴ-4. 평가결과(인천) .....	57
표 Ⅴ-5. 평가결과(대구) .....	58
표 Ⅴ-6. 평가결과(대전) .....	59
표 Ⅴ-7. 평가결과(광주) .....	61
표 Ⅴ-8. 평가결과(울산) .....	62
표 Ⅴ-9. 평가결과(세종) .....	64
표 Ⅴ-10. 평가결과(경기) .....	65
표 Ⅴ-11. 평가결과(강원) .....	67
표 Ⅴ-12. 평가결과(충북) .....	68
표 Ⅴ-13. 평가결과(충남) .....	70
표 Ⅴ-14. 평가결과(전북) .....	71
표 Ⅴ-15. 평가결과(전남) .....	73
표 Ⅴ-16. 평가결과(경북) .....	74
표 Ⅴ-17. 평가결과(경남) .....	76
표 Ⅴ-18. 평가결과(제주) .....	77
표 Ⅵ-1. 응답자 특성 .....	82

표 VI-2.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 및 지역유형별)	85
표 VI-3.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 및 지역유형별)	88

## 그림 목차

그림 V-1. 평가결과(총점) .....	46
그림 V-2. 평가결과(정책형성) .....	47
그림 V-3. 평가결과(정책집행) .....	48
그림 V-4. 평가결과(정책성과) .....	49
그림 V-5. 평가결과(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	50
그림 V-6. 평가결과(정책기반 확보수준) .....	51
그림 V-7. 평가결과(추진기반의 효율성) .....	52
그림 V-8. 평가결과(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	53
그림 V-9. 평가결과(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	53
그림 VI-1.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전체) .....	83
그림 VI-2.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별) .....	86
그림 VI-3.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전체) .....	86
그림 VI-4.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별) .....	88
그림 VI-5. 기업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업무스킬 IPA(전국) .....	90
그림 VI-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국) .....	92
그림 VI-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요인 IPA(전국) .....	94
그림 VI-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서울) .....	96
그림 VI-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서울) .....	98
그림 VI-1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부산) .....	100
그림 VI-1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부산) .....	102
그림 VI-1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대구) .....	104
그림 VI-1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대구) .....	106
그림 VI-1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인천) .....	108
그림 VI-1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인천) .....	110
그림 VI-1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광주) .....	112
그림 VI-1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광주) .....	114
그림 VI-1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대전) .....	116
그림 VI-1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대전) .....	118
그림 VI-2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울산) .....	120

그림 VI-2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울산) .....	122
그림 VI-2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세종) .....	124
그림 VI-2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세종) .....	126
그림 VI-2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기) .....	128
그림 VI-2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기) .....	130
그림 VI-2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강원) .....	132
그림 VI-2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강원) .....	134
그림 VI-2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충북) .....	136
그림 VI-2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충북) .....	138
그림 VI-3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충남) .....	140
그림 VI-3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충남) .....	142
그림 VI-3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북) .....	144
그림 VI-3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전북) .....	146
그림 VI-3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남) .....	148
그림 VI-3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전남) .....	150
그림 VI-3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북) .....	152
그림 VI-3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북) .....	154
그림 VI-3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남) .....	156
그림 VI-3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남) .....	158
그림 VI-4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제주) .....	160
그림 VI-4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제주) .....	162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연구결과에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협력성과를 위한 행동실험 분석결과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역 대학보다 지역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여 기업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그리고 국정과제와 지역인재 및 청년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의 정책들이 매우 중복적이고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동형화(isomorphism)적 성격이 강하여 보다 기업의 현실적 전략과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이 시급하며, 지역청년인재 육성과 일자리는 지역기업의 눈높이와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선결조건의 성격이 강하다(최용환, 김영한, 권오영, 박윤수, 오문준, 2024)

이를 종합하면, 기업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고용 효과에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지역 생산성 제고와 지역 활력 증진에 파급효과를 높이는 지자체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추진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산업별로 종합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획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이 시도의 활력과 신성장 동력마련,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에 대한 개선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용에 대한 2차 통계자료, 각 시도의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용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output)과 효과성(outcome)을 정성적 분석한다. 청년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 단순한 고용유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창출 정책의 목표달성을 수준이라는 성과(output)적 측면 보다 지역사회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정책효과성(outcome)을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와 같은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 이어, 청년정책 및 정책의 전문가 응답 수 및 표본 수 총 528개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중요성과 성과도, 산업별 효과성, 미래 산업 파급력을 조사하여 향후 전략수립을 제안한다.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와 시도별 청년고용 통계조사

본 연구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를 위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현재 지역 청년고용정책 분석의 주요 현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와 고용행정통계(<https://eis.work24.go.kr>)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시도별 청년고용 현황을 진단한다. 이는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2) 광역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지표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지표는 정책의 달성도 외에도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문헌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사이트에 게시된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는 분석기준에 따라 광역시도의 청년고용정책 효과성이며, 서면평가형식으로 질적분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분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추진되었음.

표 1-1. 광역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분석대상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a href="https://www.youthcenter.go.kr/">https://www.youthcenter.go.kr/</a> ) 사이트의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자료를 대상으로 지역 청년고용정책 -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	
조사내용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는 광역시도의 청년고용정책 효과성	
분석방법	- 서면평가형식으로 질적분석 추진	
분석시기	- 2025년 6월~7월	

### 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앞선 광역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에 이어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미래산업 전략수립 연구를 위하여 '지역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미래산업 전략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조사의 모집단은 청년고용 및 청년정책관련 실무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이며, 표집들은 청년정책, 청년전문사업 종사자 및 활동가, 경제학, 정책학,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이다. 조사는 온라인 웹조사로 위탁조사업체를 통해 추진하며, 조사표집은 약 1개월 간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700여 명 중 전문가조사의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그리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2차 신속심의에 제출된 조사설계에 따라 거주지역에 기반한 1차조사 이후 17개 시도가 30개 표본이 미만인 지역은 응답가능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에 입각하여 30개의 응답 수 표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응답 수 표본은 총 528개이다. 또한 조사시기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표 1-2.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청년고용 및 청년정책관련 실무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표집틀	- 청년정책, 청년전문사업 종사자 및 활동가, 경제학, 정책학,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표집	- 약 1개월 간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700여명을 대상	
표본수	-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명을 대상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여 유효표본 200명 내외	
조사시기	- 2025년 8~9월	

## ○ — 제2장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 2.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본 2장에서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문헌을 통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쟁점과 성과분석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먼저, Gobillon과 Magnac(2016)은 1990년 프랑스에서 추진된 지역고용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파리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리고 O'Reilly et al.(2025)은 청년고용의 해법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교육 및 기술 수준, 청년이동과 유입, 가족의 유산의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의 성과는 청년노동시장의 수요과 공급에 따른 직업훈련이 가장 그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고윤숙과 이영민(2024)는 퍼지셋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의 청년고용정책의 성과를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중을 결과변인으로 하고 재정자주도, 청년인구비율, 청년실업률, 인구소멸지수, 경제활동참가율, 상용근로자 비율 등은 원인변인으로 분석하였다(고윤숙, 이영민, 2024). 분석결과, 고윤숙과 이영민(2024)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청년고용정책보다는 지자체의 인구감소문제에 더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지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형돈(2024)는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으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

년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청년고용정책의 정책대상은 단순히 청년이라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별, 학력, 지역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낮은 급여 수준을 높이기에는 비현금성 보상과 현금성 보상을 같이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김형돈, 2024). 그리고 김형돈(2024)은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수직적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직 및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청년고용정책의 재원을 정부재원 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태형과 윤성원(2023)은 2021년 지방재정 365의 예산지출 자료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청년대상 고용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자체의 청년고용사업의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의 청년고용보다는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양적으로 많았으며, 예산 지출에서는 고용보조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형, 윤성원, 2023). 특히 이태형과 윤성원(2023)은 대도시 지역은 고용보조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농어촌은 창업지원정책이 우선시됨을 확인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지자체 청년고용지원정책의 중앙부처 청년고용지원정책과의 과도한 중복성, 현금성 지급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성과지표가 부재한 지자체의 창업지원정책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박종훈, 이경재와 이성우(2018)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을 다층 로짓모형(Multi Level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모형은 공간적으로 산업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고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이주여부, 지역특성 변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연령, LQ지수(전국 대비 지역 내 특정산업의 비중의 특화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산업 간 다양성 지수, 지역별 산업체 수, 전문대 및 대학 수 등을 고려하였다(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분석결과, 박종훈, 이경재와 이성우(2018)는 청년층 중에서 저연령, 여성, 초대졸 및 대학 중퇴자는 경력단절로 고용이 쉽지 않아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직업훈련, 육아서비스 등이 중요하며, 도시지역은 특정산업을 집중육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은 다양한 산업의 특화보다는 특정산업을 집중하는 것이 지역청년고용 창출에 더욱 유리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성과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청년고용정책은 지역별로 달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또한 박종훈과 이경재(2018)는 지역 청년노동시장의 산업군별 효과성 제고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심과 비도심 지역을 구분하여 다층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나 학업을 중단한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보다 우선적인 지역차원의 청년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자체 중에서도 도농간의 청년고용 성과의 차이가 크게 나므로 지역의 특성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박종훈, 이경재, 2018). 나아가 박종훈과 이경재(2018)는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보다 근무지 중심으로 지역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산업분류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도출될 수 있는 분류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환(2022)은 지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김태환(2022)은 청년고용을 경험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03개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웹조사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정책은 ①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 ②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 ③ 정부 R&D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④ 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 ⑤ 청년친화 기업 인증 및 우대홍보, ⑥ 고용서비스 지원, ⑦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⑧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년고용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간접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이었으며, 청년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보건, 복지를 담당하는 소규모 기업은 청년고용촉진의 정책요구도가 낮았으며,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김태환, 2022). 마지막으로 김태환(2022)은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보조에 대한 정책지원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태환(2022)은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맞춤형 고용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청년고용정책은 직접비용지원, 간접비용지원, 인력양성지원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분석평가 연구

이상아와 이승윤(2018)은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정책의 주체성, 예산의 독립성, 서울시 청년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의 정합성 그리고 지역내 정책주체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시는 청년허브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하여 '서울형 청년고용정책'이라는 주제성은 확보하였으나, 예산의 독립성, 노동시장의 정합성, 전달체계의 연계성에서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장기실업에 효과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아, 이승윤, 2018). 이에 이상아와 이승윤(2018)은 서울시 이외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6개 시도는 지역청년고용정책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노동시장의 환경적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복지정책이 서로 결합하여 지역적 공간성과 돌봄, 주택과 보건과 같은 사회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송영남(2017)은 전국적으로 청년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고용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의 지역청년고용의 문제점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정 확보에만 집중한 결과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 전북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급여, 적성과 흥미, 고용안정성, 사회적 인식 및 근무환경을 간과한 점 때문에 지역의 청년인재가 지역내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송영남, 2017). 이에 송영남(2017)은 전라북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내실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북유치, 신산업 발굴과 사업화, 전북지역의 농식품관련 청년창업활성화, 지역일자리 산업의 전면개선 등을 통해 전북청년들이 지역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부가적으로 전북 지역기업과 수도권 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보전, 중소기업 경력 배우처제도를 통한 경력사다리 강화, 청년고용친화 기업의 고용개선 및 중소기업 복리후생 강화 등의 전북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송영남, 2017).

또한 유일과 김선명(2011)은 지역 산업동향 분석 및 청년고용정책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사례에 대한 지역 경기 동향 및 구조적 실업 상태 분석, 지역 산업

구조의 동향 분석, 지역 산업 및 고용 특성 분석, 지역 고용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광주광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한 청년고용촉진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광역시는 서비스업의 증가와 건설 및 정보통신업의 쇠퇴, 영세업체의 감소 대비 5인 이상 업체는 증가세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자는 고학력과 함께 청년보다 중장년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고 하였다(유일, 김선명, 2011). 또한 유일과 김선명(2011)은 광주광역시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내적 변화 및 고용시장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방안 모색, 서비스업종 인력양성 및 청년취업을 유인하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기술인력 양성과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청년인턴제 확대와 저학력자 재교육과 취업지도, 구직-구인 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태운과 박선주(2019)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고용정책사업의 정책 일관성을 정책주체 간 파트너십의 공급 측면과 지역적 특성과 같은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청년고용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사성을 갖는 이유는 공급적 측면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의 높은 관심도,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숙지도, 고용정책에 대한 경험부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수요적 측면에서는 청년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영체계가 부재하며 지방고용노동정책의 지나친 지침엄수,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미흡으로 인한 정책기획능력의 저하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태운, 박선주, 2019). 구체적으로 김태운과 박선주(2019)는 대구광역시의 청년고용사업을 국시비사업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한정하였으며, 시비사업은 기업인턴사업,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테마별 취업지원사업, 리크루트 투어사업, 청년ICT창업성장센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그들은 지자체의 청년사업 담당자들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권한을 가지고 유연한 집행을 하는 것과 중앙정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청년고용사업의 역량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김태운, 박선주, 2019).

그리고 황덕순, 주진우와 최봉(2016)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그들은 서울시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 하락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약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빈곤을 심화, 학교와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의 통합적 지원정책 부재 등을 지적하

면서, 서울시에 적합한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황덕순, 주진우, 최봉, 2016). 그리고 황덕순, 주진우와 최봉(2016)은 서울지역의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으로 타 시도보다 정규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청년집단의 비율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교육기간에 따른 높은 학자금으로 인한 신용지원의 높은 필요성,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청년이 많아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한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새로운 정책적 공백을 거버넌스로 채우려고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고용정책과 새로운 고용정책이 혼재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황덕순, 주진우, 최봉, 2016). 그럼에도 황덕순, 주진우와 최봉(2016)은 서울시의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유급의 일학습 병행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매우 주목할만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어 임광현, 이동진(2009)은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층 고용정책과 제도 그리고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청년 고용 환경은 농림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이 타 시도보다 취약한 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독자적인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전북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업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국 청년의 임금수준에 비해 전북 청년의 임금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북지역 청년들은 직업의 안정성과 급여를 고려할 때 공기업 및 공무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유보임금과 신규취업자 간의 임금과리가 매우 심하다고 하였다(임광현, 이동진, 2009). 임광현, 이동진(2009)은 전북지역 청년고용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지역의 청년들에게 고용지원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간의 연구개발 투자 컨소시엄 구성, 공동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대기업과 우량 중기기업의 육성, 전북 경제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정책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양대정(2018)은 고용창출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청년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로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양대정(2018)은 패널실증모형에서 고용률의 증감,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투자지출 증가율,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였으며, 임시직의 비중과 양질의 일자리 추세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이 청년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영향력이 줄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잡미스매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양대정, 2018). 따라서 양대정(2018)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역청년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양대정(2018)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4차산업의 기술을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융합하여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고, 농업과 어업에 스마트산업을 접목하는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신규인력채용 부담경감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광주 전남형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의 적극 추진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홍성우(2012)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홍성우(2012)는 일자리지원사업을 고용서비스, 직업개발훈련, 직무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고용장려금, 지원에 의한 고용, 직접일자리 창출, 창원지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청년층 노동력의 외부유출이 높은 광주와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성과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광주와 전남에 위탁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잡영플라자 운영, 직업안정기관운영,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정보화마을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은 직접일자리 창출로 공통적으로 추진하였다(홍성우, 2012). 반면에 홍성우(2012)는 광주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R&D 취업약정, 특성화고 취업약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남은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벤처동아리 사업화지원, 대학벤처 동아리육성, 창업보육센터지원,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홍성우(2012)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매칭되어 이들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1년 단위의 예산회기와 중복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에서 민간 위탁기관의 효율적 활용을 주장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금형산업, 광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남지역은 생명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전략육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 — 제3장 시도별 지역 고용 노동 및 고용행정 통계분석과 청년고용 환경

- 1.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통계 분석
- 2. 시도별 지역 고용행정통계 분석
- 3. 지역별 청년고용환경 및 시사점



앞선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3장에서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2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 및 고용행정 통계분석과 청년고용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시도별 지역 고용노동통계 분석

각 지역의 고용 관련 현황은 전체 종사자, 채용, 이직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I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는 20,082,261명이고, 이 중에서 경기도가 4,985,67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서울이 4,852,259명으로, 경기와 서울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상용 및 임시일용직 종사자와 기타 종사자 현황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채용의 경우도 2024년 기준 전국 881,361명 중에서 경기와 서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어서 인천, 경북, 부산 순이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62.7%이며, 제주가 가장 높고 전남, 충북, 세종 순이다. 하지만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 46.1%로, 전체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이 51.2%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세종, 경남, 대구 등이 낮은 수준이다. 모든 시도에서 청년고용률은 전체 고용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이직률은 5%이며, 전북과 전남이 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높다.

표 III-1. 지역별 고용현황

	전체 종사자 (명)	상용 및 임시일용 종사자(명)	기타 종사자 (명)	채용 (명)	고용률 (%)	청년 고용률 (%)	이직률 (%)	자발적 이직(명)	비자발적 이직(명)
전국	20,082,261	18,826,144	1,256,117	881,361	62.7	46.1	5.0	299,333	565,200
서울	4,852,259	4,595,860	256,399	173,027	61.7	51.2	4.2	76,871	97,722
부산	1,194,950	1,086,540	108,410	45,249	57.8	46.1	4.5	16,653	28,108
대구	762,722	705,718	57,004	43,951	58.0	37.5	6.6	10,835	32,055
인천	979,137	930,760	48,378	48,966	63.5	47.4	5.5	17,189	30,549
광주	536,835	496,141	40,695	29,207	60.6	38.1	6.3	7,085	21,944
대전	570,002	527,523	42,478	31,814	60.6	43.4	6.4	8,538	22,668
울산	444,293	424,735	19,558	19,436	59.8	40.2	4.8	4,986	13,462
세종	136,934	129,544	7,389	6,370	65.2	36.2	5.5	1,969	4,239
경기	4,985,674	4,622,675	362,999	222,530	64.1	49.5	5.1	78,785	137,244
강원	531,144	492,625	38,520	22,980	63.5	48.1	5.1	7,842	13,393
충북	668,797	628,756	40,042	23,851	65.9	47.9	4.1	9,761	13,377
충남	877,011	830,341	46,670	36,034	64.8	44.2	4.7	12,951	22,039
전북	589,181	545,323	43,859	36,743	63.8	38.0	7.1	7,367	28,485
전남	666,320	615,672	50,648	43,728	66.1	41.2	7.7	7,464	36,604
경북	914,667	883,079	31,588	48,399	64.0	41.3	5.8	11,312	35,811
경남	1,154,913	1,103,033	51,880	42,124	62.1	36.5	4.0	15,668	24,572
제주	217,423	207,822	9,602	6,951	69.3	42.1	3.8	4,058	2,929

\* 출처: 고용노동통계(2024). <https://laborstat.moel.go.kr/>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2024).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 에서 2025년 4월 23일 인출

지역별 종사자의 성별 현황은 <표 III-2>와 같다. 2023년 기준 자영업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경기의 경우 남성 자영업자가 169,912명이고 여성 자영업자는 103,158명이다. 모든 지역에서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자영업자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무급가족 및 기타 종사자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이 역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지만,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비록 이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지만, 성별 간 차이가 상용근로자보다는 적다.

표 III-2. 성별 종사자 현황

	남성 자영업자 (명)	여성 자영업자 (명)	남성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명)	여성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명)	남성 상용 근로자(명)	여성 상용 근로자(명)	남성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여성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전국	637,212	390,138	388,655	547,509	8,616,049	6,062,773	1,286,603	1,230,396
서울	121,168	71,640	72,564	107,469	2,069,116	1,714,137	326,458	282,827
부산	47,184	28,752	31,799	39,574	455,047	375,331	90,731	89,151
대구	35,052	18,266	18,368	26,557	296,782	248,202	47,221	52,787
인천	33,904	20,272	21,689	26,218	406,343	298,644	55,826	67,502
광주	16,374	11,016	13,147	18,260	198,692	159,612	46,052	39,994
대전	18,225	11,153	10,828	16,206	224,477	174,121	43,391	36,267
울산	12,114	8,034	7,270	12,638	230,466	106,353	33,072	20,865
세종	3,498	2,727	2,781	3,134	44,987	34,299	5,728	7,012
경기	169,912	103,158	88,962	126,349	2,241,564	1,423,947	295,396	306,353
강원	18,845	12,653	14,976	18,360	187,157	146,762	44,226	41,387
충북	19,108	11,552	13,497	16,075	300,520	183,229	39,574	32,950
충남	24,622	16,005	14,982	22,708	408,717	220,605	47,573	45,506
전북	18,130	11,839	14,811	19,607	229,775	171,082	31,622	33,477
전남	17,493	12,451	17,180	20,982	263,815	164,610	56,154	39,225
경북	30,406	17,963	17,392	25,749	435,195	248,152	53,406	55,423
경남	41,409	25,369	23,926	40,477	539,944	324,134	55,289	62,081
제주	9,768	7,288	4,483	7,146	83,452	69,553	14,884	17,589

\*출처: 고용노동통계(2023) <https://laborstat.moel.go.kr/>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지역별 근로 여건은 상용근로일수,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상용월급여액, 노사분규건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국 평균 근로일수는 20.5일이며, 부산과 전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외에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상용총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69.8시간과 비교할 때 경남, 충남, 충북,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용총초과근로시간은 경북, 경남, 울산이 높은 편에 속한다. 전국 평균 상용월급여액은 3,717,328원이고, 서울이 4,082,853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3,036,703원으로 가장 낮다. 노사분규건수는 경기도가 28건으로 가장 많다.

표 III-3. 지역별 근로 여건 현황

	상용근로일수 (일)	상용총근로시간 (시간)	상용초과근로시간 (시간)	상용월급여액 (원)	노사분규건수
전국	20.5	169.8	9.8	3,717,328	131
서울	20.3	166.1	5.9	4,082,853	17
부산	21.0	168.8	7.0	3,404,468	8
대구	20.6	169.3	10.0	3,202,101	11
인천	20.6	171.5	9.8	3,418,862	5
광주	20.4	166.1	8.0	3,284,566	4
대전	20.3	164.0	5.7	3,556,267	5
울산	20.5	170.2	14.8	3,725,381	15
세종	20.2	170.8	14.0	3,685,371	0
경기	20.6	171.4	9.2	3,751,651	28
강원	20.6	166.9	8.8	3,285,138	0
충북	20.6	172.4	13.7	3,439,403	4
충남	20.6	173.0	14.5	3,669,868	11
전북	20.7	169.0	11.1	3,192,759	2
전남	21.0	169.4	8.8	3,445,263	3
경북	20.5	172.1	14.9	3,563,537	9
경남	20.9	174.6	14.8	3,560,180	8
제주	20.7	168.0	5.6	3,036,703	1

\*출처: 고용노동통계(2022). <https://laborstat.moel.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 2. 시도별 지역 고용행정통계 분석

지역의 고용행정통계 중 지역별 사업장 및 구인·구직·취업 현황은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전국의 전체 사업장 수는 2,704,825개이며, 이중 경기도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많다. 구인인원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은 153,856명이다. 경기도가 42,5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경남, 부산 등이 많은 편이며, 반면 세종과 제주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국 청년인구는 13,726,215명이며, 경기(3,793,428명)와 서울(2,911,530명)의 청년인구가 전국 청년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구인인원을 고려하여 청년인구를 보면, 청년의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시도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구직건수는 전국 기준으로 480,008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를 보인다. 그리고 전국 취업건수는 156,829건이다. 이 역시 경기와 서울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경기의 경우 모든 현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서울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4. 지역별 사업장 및 구인·구직·취업 현황

(2025년 3월 기준, 청년인구는 2023년 기준)(단위: 개, 명)

행정구역별	사업장수(전체)	구인인원월)	청년인구(명)	구직건수(월)	취업건수(월)
전국	2,704,825	153,856	<b>13,726,215</b>	480,008	156,829
서울	527,089	24,272	<b>2,911,530</b>	78,714	24,166
부산	160,423	10,629	<b>819,916</b>	37,626	11,627
대구	110,506	5,920	<b>597,998</b>	24,285	7,393
인천	138,693	8,842	<b>824,736</b>	31,945	10,312
광주	65,716	2,491	<b>390,133</b>	14,074	4,348
대전	70,727	2,210	<b>424,551</b>	12,852	3,950
울산	52,921	3,558	<b>272,316</b>	11,953	3,672
세종	16,738	810	<b>108,220</b>	3,144	857
경기	714,024	42,551	<b>3,793,428</b>	134,266	40,931
강원	89,119	3,700	<b>353,639</b>	11,561	5,431
충북	89,635	5,649	<b>418,480</b>	12,841	5,137

행정구역별	사업장수(전체)	구인인원(월)	청년인구(명)	구직건수(월)	취업건수(월)
충남	121,849	6,975	<b>551,236</b>	17,414	5,450
전북	94,823	6,652	<b>406,853</b>	17,731	6,520
전남	98,998	6,224	<b>381,018</b>	13,263	5,380
경북	145,809	9,136	<b>572,093</b>	22,826	8,628
경남	164,610	13,186	<b>736,071</b>	30,617	11,537
제주	43,145	1,051	<b>163,570</b>	4,896	1,442

\*출처: 고용행정통계(2025)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2023)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에서 2025년 4월 23일 인출

지역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등의 지급 현황은 <표 III-5>에 나타나 있다. 2024년 전국 실업급여지급자 수는 1,808,127명이다. 이중 경기가 494,86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 338,204명, 부산 126,196명 등의 순이다. 실업급여지급 건수는 8,266,446건이며, 이 역시 서울과 경기에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지급액도 서울과 경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출산전후 순지급자 수의 경우는 전국 83,312건이며, 이중 서울이 32,700건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과 제주는 적은 건수를 보인다. 육아휴직 순지급자 수는 전국 306,834건이다. 서울이 117,59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 부산 순으로 많다.

표 III-5. 지역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지급자 현황(2024년 기준)

행정구역별	실업급여 지급자수 (년)	실업급여 지급건수 (년)	실업급여지급액 (년)(원)	출산전후 순지급자수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전국	1,808,127	8,266,446	12,303,446,529,130	83,312	306,834
서울	338,204	1,517,477	2,261,270,153,660	32,700	117,596
부산	126,196	583,317	857,208,999,000	4,189	14,187
대구	83,833	390,511	576,500,561,760	2,791	8,876
인천	112,930	508,668	762,907,996,420	3,197	11,458
광주	49,323	232,988	346,648,514,630	1,732	5,690
대전	51,538	241,141	351,168,334,980	2,512	10,627

행정구역별	실업급여 지급자수 (년)	실업급여 지급건수 (년)	실업급여지급액 (년)(원)	출산전후 순지급자수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울산	45,715	218,329	328,968,476,190	1,398	5,493
세종	10,842	49,825	73,622,229,060	553	2,215
경기	494,867	2,228,892	3,366,981,056,390	17,935	65,783
강원	53,635	243,707	356,832,146,940	2,045	7,935
충북	51,523	241,487	358,568,063,380	2,020	7,478
충남	62,935	290,186	432,537,185,740	2,273	9,670
전북	54,059	255,906	374,320,682,070	1,673	6,373
전남	50,437	228,620	337,823,431,310	1,845	7,064
경북	87,544	411,317	597,207,098,620	2,402	9,940
경남	113,990	527,115	777,171,516,990	3,143	12,763
제주	20,556	96,960	143,710,081,990	899	3,673

\*출처: 고용행정통계(2024).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지역별 실업자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은 <표 III-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실업훈련실시인원은 전국 기준으로 볼 때 2024년 12월에 비해 2025년 3월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업훈련실시인원은 서울이 가장 많은데 비해, 증가폭은 경기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자 수의 경우도 전국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비해 2025년 3월에 증가하였다. 경기가 가장 많은 발급자수를 보이면서 동시에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는 전국 기준 1,407,235명이며 이 중에서 경기 317,875명과 서울 247,978명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표 III-6. 지역별 실업자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

(2024년 12월, 2025년 3월 기준)

행정구역별	24년 12월 실업 훈련실시인원	25년 3월 실업훈련실시 인원	24년 12월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자수 (월)	25년 3월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자수 (월)	국민취업지원 제도참여자수
전국	45,057	59,654	67,251	91,538	1,407,235
서울	16,463	17,776	13,859	17,194	247,978
부산	3,344	4,135	4,590	5,988	124,715
대구	2,527	3,478	3,275	4,678	88,977
인천	2,722	4,466	4,575	6,316	99,692
광주	1,445	2,386	1,939	2,914	49,077
대전	1,305	1,292	1,847	2,660	41,767
울산	931	1,501	1,645	2,210	34,787
세종	95	105	432	602	5,687
경기	8,296	13,605	19,591	27,443	317,875
강원	514	767	1,449	2,058	32,961
충북	627	862	1,599	2,137	40,191
충남	978	1,205	2,045	2,908	44,521
전북	1,772	1,963	2,007	2,985	55,163
전남	709	979	1,541	2,284	38,257
경북	1,163	1,636	2,568	3,145	71,279
경남	1,898	3,093	3,678	4,939	101,302
제주	268	405	610	1,075	12,942

\*출처: 고용행정통계.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표 III-7〉에서는 지역별 외국인고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고용 사업장 수는 전국 기준으로 65,483곳이다. 경기도가 25,399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충남 등도 상대적으로 많다. 외국인 근로인수는 총 271,925명이며 경기도가 103,561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에 대한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 가장 많고 이어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의 순으로 많다.

표 III-7. 지역별 외국인고용 현황(2024년 4분기 기준)

행정구역별	사업장수	외국인근로 인원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광업	임업
전국	65,483	271,925	219,507	7,012	31,046	1,032	13,282	12	34
서울	2,649	1,872	562	1,137	31	142	0	0	0
부산	1,715	8,421	7,663	356	103	14	285	0	0
대구	976	5,646	5,505	12	117	12	0	0	0
인천	3,163	12,493	11,258	497	73	38	627	0	0
광주	704	3,539	2,811	515	171	42	0	0	0
대전	256	988	934	32	16	6	0	0	0
울산	980	6,510	6,172	53	64	2	219	0	0
세종	258	1,447	1,049	248	142	8	0	0	0
경기	25,399	103,561	92,443	1,871	8,540	396	311	0	0
강원	1,324	4,492	2,389	189	1,403	49	446	3	13
충북	3,119	17,633	15,507	86	1,896	111	13	5	15
충남	5,495	25,148	17,852	537	5,556	29	1,174	0	0
전북	2,622	9,990	5,821	257	3,004	11	897	0	0
전남	4,828	16,358	7,803	572	2,691	51	5,241	0	0
경북	3,651	17,879	14,162	233	2,532	15	927	4	6
경남	6,928	32,423	26,605	411	3,563	61	1,783	0	0
제주	1,416	3,525	971	6	1,144	45	1,359	0	0

\*출처: 고용행정통계.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 3. 지역별 청년고용환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별 청년고용환경의 현황 분석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종사자와 채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더 크다. 하지만 청년고용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전체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둘째, 청년을 포함한 성별 종사유형의 경우 대체로 자영업이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지만 무급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셋째, 청년고용의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 월 급여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고 울산과 경기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역별 사업장 및 구인·구직·취업 현황, 지역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등의 지급 현황, 지역별 실업자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 등은 전체 청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의 현황이 다른 지역보다 큰 차이로 높은 편이다. 다섯째,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근로인등의 현황은 경기도가 가장 높지만, 그 이외에는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고용 현황은 물론이고 청년고용환경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 고용 기회의 구조적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나 활성화도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환경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 ○———— 제4장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지표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 4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분석지표

본 장에서는 현재 17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본 평가체계와 성과분석의 지표는 정책의 달성도 이외의 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분석평가(최용환, 김강배, 장선희, 조예진, 2018), 사회정책 중 도박관련 지역센터 운영평가(최용환, 곽창규, 이성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평가(최용환, 이동성, 장혜운, 임채홍, 2023) 등의 공통적 요소를 기반하였다.

특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총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사이트의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자료를 대상으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성과와 정책효과성을 정책전문가의 분석평가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 1) 분석지표 개발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지표는 정책과정모델(policy process model)에 기초하여 개발될 수 있다.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역시 정책과정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이후 일정한 성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효과분석이 된다. 따라서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지표도 정책과정에 따라 개발하고 구성할 수 있다.

정책과정은 크게 기획, 집행, 성과로 구분되며, 이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를 의미한다. 이 세 단계는 분석지표 구성의 기본 틀이 된다. 따라서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지표도 기획, 집행, 성과에 각각 해당하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각 단계는 다시 세부효과분석 영역과 세부지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책 관련 유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문헌 검토와 지역의 특성 및 청년고용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과정의 주요 산물이 정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책산출(policy output)과 정책결과(policy outcome)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과분석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정책결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산출을 통한 정책결과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고용정책도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정책결과를 통해 청년고용이 실제 실현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효과분석 지표에 모두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 (2) 분석지표의 구성 및 체계

지역의 청년고용정책의 효과 분석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분야별 효과 분석은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형성 35점’, ‘정책집행 25점’, ‘정책성과 40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분석지표는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위 분석지표로 다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지역청년고용정책의 효과분석 지표

분야	효과분석 항목	세부 효과분석 항목	배점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1)	1-1. 지역청년고용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1-2.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분야	효과분석 항목	세부 효과분석 항목	배점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총점			100

항목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21점)
지표	1-1. 지역청년고용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7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적 효과를 위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지닌 공공정책으로서 지역청년고용정책 수립 여부와 노력 정도</b></li> <li>- 지역의 청년고용정책이 일시적 시급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수혜대상의 합리적 규모, 사업의 비중복성, 사업의 제안배경, 성과목표 등의 측면에서 관련자들의 이해와 타당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수: 7점~5점) 일시적</b> 시급성에 따른 사업추진이 아니며 타 정책 사례의 일반적 수용이 아닌 사업의 제안 배경, 사업의 독창성, 제안 근거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충실히 확보</li> <li>• <b>(보통: 4점~2점) 시의성 등으로</b> 사업을 추진하지만 차년도 사업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존재</li> <li>• <b>(미흡: 1점~0점) 정책의 정당성보다</b> 일시적 시급성에 따른 사업의 성격과 타 사업과 중복적 성격이 큼. 그리고 사업의 추진의 논리와 타당성이 부재</li> </ul>
지표	1-2.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7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청년고용정책 추진 관련 기구(조직, 부서, 부처, 센터 등) 구성 및 운영의 다양성</b></li> <li>- 인적특성과 지역특성에 따른 <b>지역청년고용정책 추진 관련 기구</b>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li> <li>○ <b>청년, 기업, 대학의 의견 수렴의 충실성</b></li> <li>- 해당 지역의 <b>청년고용정책 추진 관련 기구</b> 운영실적이 분기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li> </ul>

항목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2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의 <b>청년고용정책</b>이 지역별 청년인재양성 정책요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li> <li>○ <b>지역특수성의 고려</b></li> <li>- 타 지역 유사 정책의 벤치마킹을 넘어 청년인구현황, 지역의 대학 및 기업 문화 등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조사·분석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추진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li> <li>- 전담인력 보유 등 타 지자체 대비 행정역량 차이의 반영</li> <li>○ <b>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b></li> <li>- 타 지역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 및 프로그램인지 판단</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수: 7점~5점)</b>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 등에 대한 <b>의견수렴이 매우 우수하며</b>, 해당 지역만의 지역특수성을 통계적으로 반영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인 경우</li> <li>• <b>(보통: 4점~2점)</b>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 등에 대한 <b>의견수렴이 보통이며</b>, 해당 지역의 지역특수성이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통상적 수준으로 분석되어 반영된 경우</li> <li>• <b>(미흡: 1점~0점)</b>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 등에 대한 <b>의견수렴이 미흡하며</b>, 지역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li> </ul>
지표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7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b></li> <li>㉠ 성과지표의 관련성 및 사업실적에 따른 정책효과성 측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사업내용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li> <li>- 성과지표가 측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판단</li> <li>- 사업대상의 만족도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표를 병용 다각적인 관점에서 성과측정을 시도하였는지 여부</li> <li>- 사업수행실적을 넘어 해당 지역 청년들의 고용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분석지표로의 구성 여부 및 적절성</li> </ul> </li> <li>㉡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2년 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성취 가능한 최대치의 목표인지 판단</li> <li>-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전적인 목표치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li> </ul> </li> <li>※ <b>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b></li> <li>①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 : 상승 국면일 경우 추세치 수준 이상의 설정, 하향 국면일 경우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li> <li>b.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 상승 국면일 경우 상승추세치 반영, 하향 국면일 경우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li> </ul> </li> </ul>

항목	1.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21점)
	② 신규 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포함) ④ 지역청년고용정책의 성과와 관련한 국가통계 및 효과분석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기준이 되는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기준의 적절성 및 해당 국가통계와 평가지수 활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li> <li>㉠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사업성과에 따른 정책효과성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투입(input), 산출(output), 정책효과(outcome)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li> <li>• (보통)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정책효과(outcome)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li> <li>• (미흡)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관련이 없음</li> </ul> </li> <li>㉡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성과목표의 설정이 타당하며 최근 추세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li> <li>• (보통) 최근 추세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함</li> <li>• (미흡) 성과목표치 설정 수준이 낮음</li> </ul> </li> </ul> <p>⇒ 단, 정책내용의 난이도, 행정능력 등 지자체 수준, 만족도 등과 같이 한계치가 있는 지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p>※ 본 지표의 평정은 ㉠와 ㉡의 종합적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 7점~5점), (보통: 4점~2점), (미흡(1점~0점))으로 평정</p>

항목	2. 정책기반 확보수준(14점)
지표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8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청년고용정책의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국가데이터 등 2차 자료 조사분석, 가용재원과 인력현황 등 지자체 내·외부의 정책여건 또는 장·단점 분석 실시 여부</li> <li>- 사전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여부</li> <li>- 청년, 기업, 대학의 정책과정 참여 정도</li> </ul> </li> <li>○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의 청년고용정책의 문제의식과 핵심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계획상 반영 정도(적합성)</li> <li>- 계획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및 결과 수준의 적절성</li> </ul> </li> <li>○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청년, 기업, 대학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li> <li>- 기업의 지자체 및 지역 민간기업, 청년 등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li> <li>- 지역 대학 등의 지자체 및 지역 대학, 청년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8점~6점) 해당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의견발굴 노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이 높음.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높음</li> <li>● (보통: 5점~3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해당 지역별 청년,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의견반영이 보통임. 기존의 타 사업 등에서 조사·분석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반영 자료로 사용함.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 수준이 보통임.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보통임</li> <li>● (미흡: 2점~0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이 낮음.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낮음</li> </ul>
지표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6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확보를 위한 지자체 및 기업, 대학 등의 협적적 노력과 예산 예산분배 대하여 판단</li> <li>○ 지역청년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및 기업, 대학의 자부담 예산의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우수노력의 사례</li> <li>- 자체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기업, 대학 정책우선순위에 지역청년고용정책이 위치 하고 있는지 평가</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6점~5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자부담 예산이 편성됨</li> <li>● (보통: 4점~2점) 자부담 예산 편성의 규모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li> <li>● (미흡: 1점~0점) 자부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li> <li>○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li> </ul>

항목	3. 추진과정의 효율성(13점)
지표	3-1.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별·과제별·프로그램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분기별 등과 같이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li> <li>-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와 지연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li> </ul> </li> <li>○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사업지침의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관련한 법령과 조례, 사업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 등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5점~4점) 추진과정과 관련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li> <li>● (보통: 3점~2점) 추진과정과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에 핵심적 내용 등을 대부분 준수</li> <li>● (미흡: 1점~0점) 추진과정과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못함</li> </ul>
지표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8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과제, 프로그램 등 관련 활동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li> <li>- 담당자 변경과 같은 사업 환경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li> <li>- 기타 사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li> </ul> </li> <li>○ 일회성 및 단순한 사업의 완수를 넘어 지역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그 추진방향의 변화에 대응노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li> </ul> </li> <li>○ 지역청년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 및 대학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청년고용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8점~6점) 정기적, 실시간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건·상황 변화에 적실성 및 적극적으로 대응함</li> <li>● (보통: 5점~3점)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은 없으나, 사업추진 상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함</li> <li>● (미흡: 2점~0점)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은 없으며, 사업추진 상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li> </ul>

항목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12점)
지표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6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청년고용정책 관련홍보, 소통, 공유의 효과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서 홍보활동과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공유를 통해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li> <li>-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li> <li>-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li> </ul> </li> <li>○ <b>해당 지역, 청년,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 및 기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li> <li>-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li> </ul> </li> <li>○ <b>해당 지역, 청년, 대학, 기업에 대한 지역청년고용정책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청년고용정책에 대하여 해당 지역, 청년, 대학,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인지 및 공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수: 6점~5점)</b> 정책 내용의 홍보와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피드백 실적이 우수하며 지역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지역, 청년, 대학, 기업들의 공감대 및 인식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수</li> <li>● <b>(보통: 4점~2점)</b> 정책 내용의 홍보와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피드백 실적이 미흡함. 또는 지역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지역, 청년, 대학, 기업들의 인식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통</li> <li>● <b>(미흡: 1점~0점)</b>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li> </ul>
지표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책 및 사업의 성과목표와 예산집행내용과의 연관성 및 효율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내역 및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이 사업 성과 또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일정한 논리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li> <li>- 예산 내역상 혹은 집행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노력</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정성판단</b></li> <li>● <b>(우수: 6점~5점):</b>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었으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우수</li> <li>● <b>(보통: 4점~2점):</b> 사업목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연계성이 보통 수준이며 예산절감 노력이 보통</li> <li>● <b>(미흡: 1점~0점):</b> 사업목적 달성과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며, 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우</li> </ul>

항목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40점)
지표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20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당 정책 및 과제, 그리고 프로그램 등의 추진계획 상 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추진 중인 경우 계획서상의 성과 달성의 적절성 정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li> <li>- <b>(정량적 판단)</b>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b>추진 중인 경우 계획서상의 성과 달성의 비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하며, 100% 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li> <li>※ 성과지표가 조례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조례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li> </ul> </li> <li>- <b>(정성적 판단)</b> 계획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자체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의도한 정책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li> </ul> </li> </ul>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수: 20점~14점)</b> 목표달성도가 100% 이상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충실</li> <li>● <b>(보통: 13점~7점)</b> 목표달성도가 80% 이상, 10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충실</li> <li>● <b>(미흡: 6점~0점)</b>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부실</li> </ul>
지표	5-2. 정책 효과성 예측(20점)
A.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상한 정책결과 및 효과의 구현 정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형성 단계에서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판단</li> <li>- 정책기획과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결과(outcome)' 가능성 간의 인과성 파악</li> <li>- 정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가능성 파악</li> <li>- 정책목표의 목표달성을 이외의 지역청년고용 관련 대상자들에게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 가능성의 무엇인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각 지역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li> </ul> </li> <li>- 지역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지도 혹은 만족도 등의 정책체감 정도</li> <li>-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정책대상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도</li> </ul> </li> <li>○ <b>지자체, 청년, 대학,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실제 지역청년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 정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지원 및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지역청년을 실제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li> <li>- 지역청년고용정책을 통한 지자체, 청년, 대학,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이 실제 지역청년 고용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평가</li> </ul> </li> </ul>

지표	5-2. 정책 효과성 예측(20점)
B.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li> <li>● (우수: 20점~14점) 본 사업의 지역청년고용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행을 넘어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성과지표가 적극적으로 반영됨</li> <li>● (보통: 13점~7점) 본 사업의 지역청년고용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보통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보다 사업의 이행성과에 보다 충실함</li> <li>● (미흡: 6점~0점) 본 사업의 본 사업의 지역청년고용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를 측정하기 어려움</li> </ul>

\* 본장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체계와 성과분석의 지표는 정책의 달성도 이외의 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분석평가(최용환, 김강배, 장선희, 조예진, 2018), 사회정책 중 도박관련 지역센터 운영평가(최용환, 광창규, 이성규, 2020),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평가(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2023) 등의 공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분야별 분석지표 구성 현황을 보면, 우선 정책형성 분야는 총 35점으로 배분되었고 이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21점)과 정책기반 확보 수준(14점)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세부 효과분석 항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i) 지역청년고용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7점), ii)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7점), iii)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7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기반 확보 수준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8점), ii)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6점)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정책집행 분야는 총 25점으로 배분하였다. 구체적인 효과분석 및 평가항목은 추진과정의 효율성(13점)과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12점)으로 구성하였다. 추진과정의 효율성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ii)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8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분되는데, i)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6점), ii) 사업관리의 적절성(6점)이 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 분야는 총 40점으로 배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을 분석한다. 세부 효과분석 항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i)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20점)과 ii) 정책 효과성 예측(20점)으로 구성하였다.

## 2)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 평가 개요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결과는 2024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7개 시도의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 사이트의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자료를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를 통해 도출되었다. 평가위원은 행정, 정책, 법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평가위원 3명을 선정하였다. 평가위원 배경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평가위원 배경 특성

조사대상자	성별	직업	전문영역	관련업무경력
평가위원 A	남	대학교수	행정학	10년
평가위원 B	남	연구원	법학	18년
평가위원 C	남	연구원	정책학	9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에 맞춰 ‘정책형성’(37점), ‘정책집행’(23점), ‘정책성과’(40점)로 분야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 — 제5장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정책분석 결과



# 5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정책분석 결과

앞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3인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추진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분석의 결과를 각 분석지표별로 살펴보고 시도별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별 평가점수 총점 및 분야별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과 같다.

표 V-1. 평가결과

지역	총점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역별 점수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영역별 점수	3. 추진과정의 효율성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영역별 점수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1-1	1-2	1-3	2-1	2-2		3-1	3-2	4-1	4-2		5-1	5-2
서울	86	29	6	6	5	7	5	21	4	7	5	5	36	18	18
경기	85	28	6	6	5	6	5	21	4	7	5	5	36	18	18
부산	81	28	7	5	6	7	5	19	4	5	6	5	35	19	16
인천	79	26	6	5	5	5	5	19	4	5	5	5	34	17	17
대전	78	26	6	5	5	5	5	19	4	5	5	5	33	17	16
충북	77	27	6	6	5	5	5	19	4	5	5	5	31	16	15
울산	74	24	6	5	5	5	5	18	4	4	6	5	33	18	15
경북	71	25	6	5	5	6	5	18	4	5	5	5	28	14	14
대구	68	25	6	5	4	5	5	17	4	4	4	5	26	13	13
충남	67	25	7	5	4	5	5	18	4	5	5	5	25	14	11
전남	66	23	5	4	4	5	5	17	4	4	4	5	26	13	13
경남	65	22	5	4	4	4	5	16	4	4	4	4	27	14	13
광주	62	22	5	4	4	5	5	15	3	3	4	5	26	13	13

지역	총점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역별 점수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영역별 점수	3. 추진과정의 효율성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영역별 점수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1-1	1-2	1-3	2-1	2-2		3-1	3-2	4-1	4-2		5-1	5-2
강원	61	22	6	4	3	5	5	15	3	4	4	5	24	12	12
전북	60	21	5	4	3	4	5	16	4	3	4	5	23	12	11
제주	58	20	5	3	3	4	6	16	4	3	5	4	23	13	10
세종	57	21	5	4	3	4	5	14	3	3	4	4	22	11	11
<b>전체 평균</b>	<b>70</b>	<b>24</b>	<b>6</b>	<b>5</b>	<b>4</b>	<b>5</b>	<b>5</b>	<b>17</b>	<b>4</b>	<b>4</b>	<b>5</b>	<b>5</b>	<b>29</b>	<b>15</b>	<b>14</b>

먼저 평가결과의 전체 평균은 70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점, 경기 85점, 부산 81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천(79점), 대전(78점), 충북(77점), 울산(74점), 경북(71점)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68점), 충남(67점), 전남(66점), 경남(65점), 광주(62점), 강원(61점) 등은 60점대에 머물렀으며, 전북(60점), 제주(58점), 세종(5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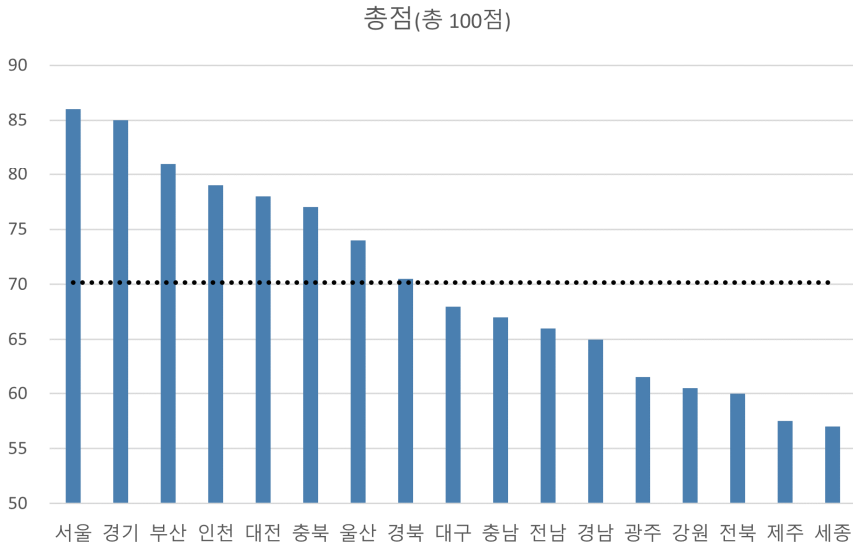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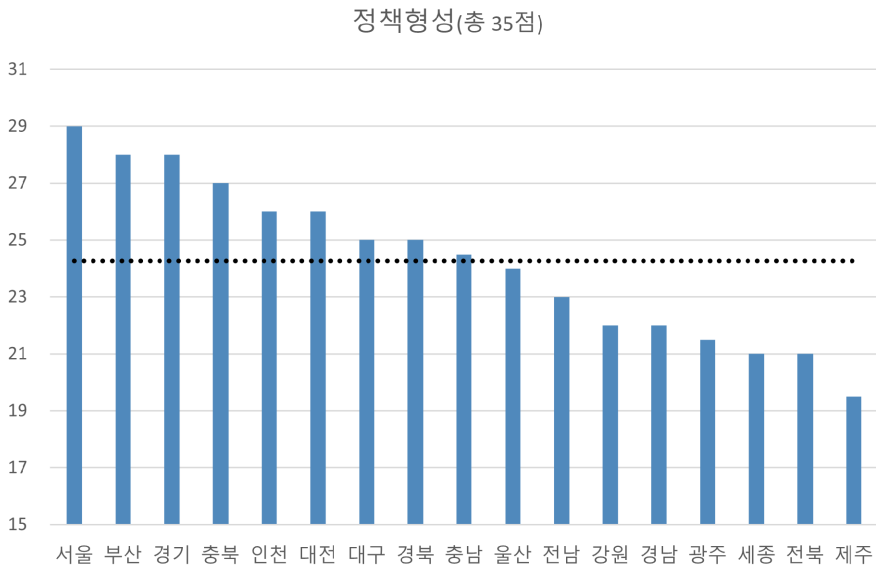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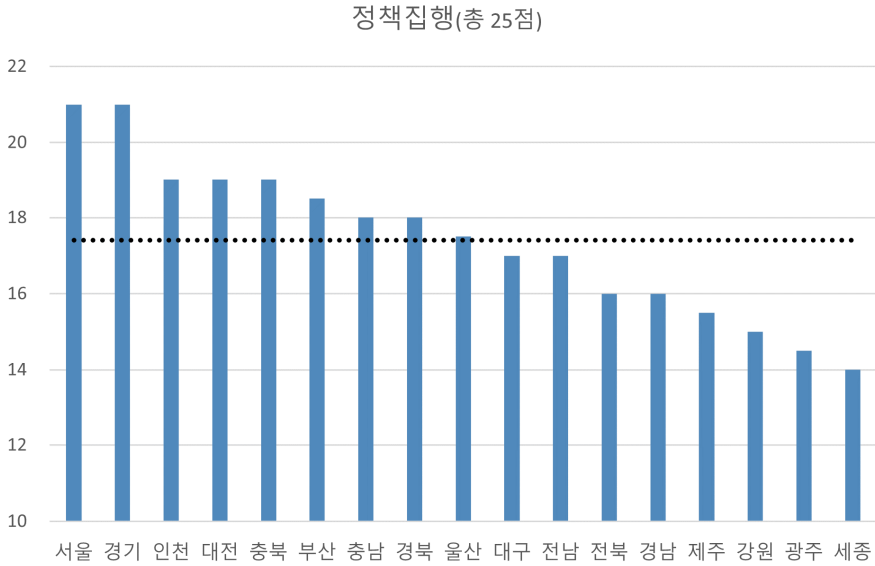
그림 V-1. 평가결과(총점)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형성의 경우 전국 평균은 24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 68점의 평균을 보인다. 상위권 지역은 서울(29점), 경기(28점), 부산(28점)으로, 계획수립의 정당성, 성과지표 설정, 예산지원 수준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천(26점), 대전(26점), 충북(27점), 경북·대구·충남(25점), 울산(24점) 역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23점), 광주·강원(22점), 전북·세종(21점), 제주(20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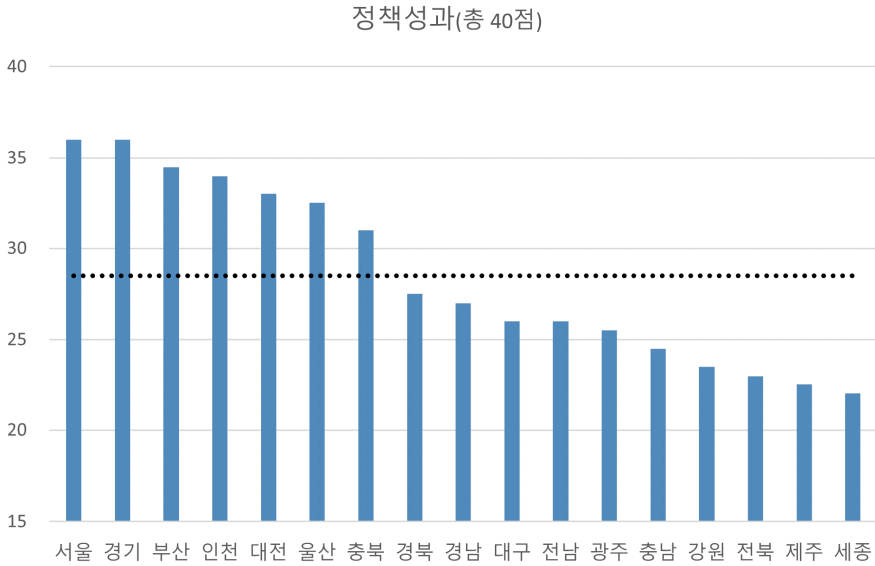
**그림 V-2. 평가결과(정책형성)**

정책집행 영역은 전국 평균이 17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 6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지역은 서울·경기(각 21점), 부산·인천·대전·충북(각 19점)으로, 추진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대응성, 정책홍보 및 사업관리 노력에서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울산(18점), 경북·충남(18점)도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구·전남(17점)은 평균 수준에 머물렀고, 경남·전북·제주(16점) 등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광주·강원(15점), 세종(14점)은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평가결과(정책집행)**

정책성과 영역은 전국 평균이 29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 7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지역은 서울·경기(각 36점), 부산(35점)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과 효과성 예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인천(34점), 대전·울산(각 33점), 충북(31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경북·경남(28점), 전남·대구·광주(26점), 충남(25점), 강원(24점)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전북(23점), 제주(23점), 세종(22점)은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평가결과(정책성과)**

세부영역별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의 평균은 15점으로 100점 환산 시 71점으로 나타났다. 부산(18점)은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경기·충북(17점)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대전·울산·경북·충남(16점)은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15점)는 평균과 동일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경남·광주·강원(13점), 전북·세종(12점), 제주(11점)의 평가 결과는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총 2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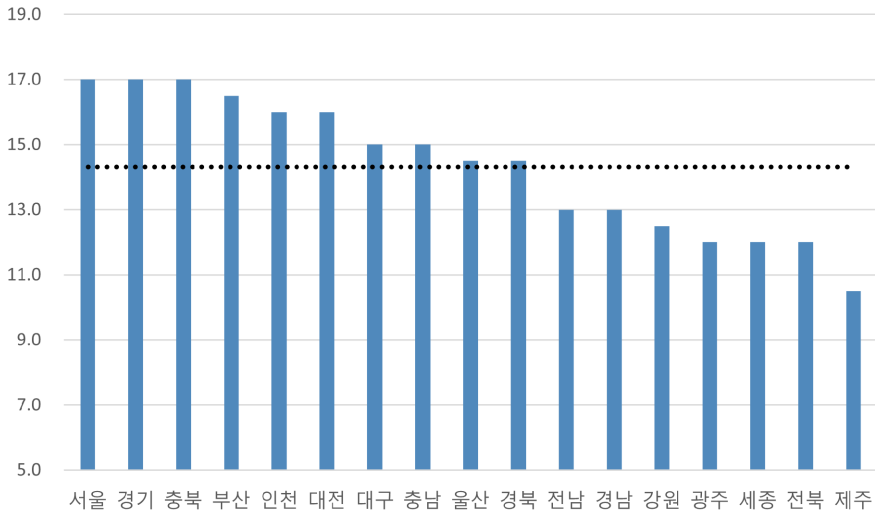


그림 V-5. 평가결과(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의 평균은 10점으로 100점 환산 시 약 71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12점)이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경기·경북(각 11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대전·충북·울산·대구·충남·전남·광주·강원·제주(각 10점)는 평균과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전북·세종(9점)과 경남(8점)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기반 확보수준(총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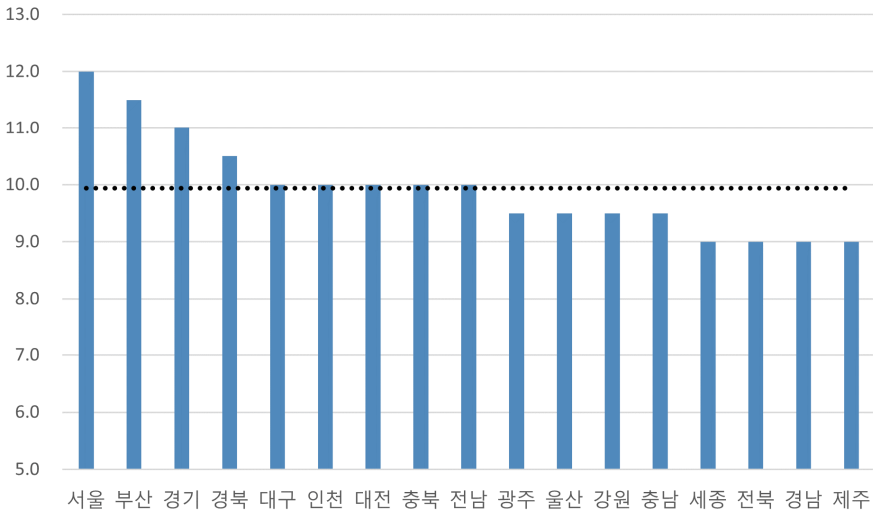


그림 V-6. 평가결과(정책기반 확보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의 평균은 약 8점으로 100점 환산 시 약 62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각 11점)가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부산·인천·대전·충북·경북·충남(각 9점)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대구·전남·경남(8점)은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강원·전북·제주(각 7점)와 광주·세종(각 6점)은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추진과정의 효율성(총 1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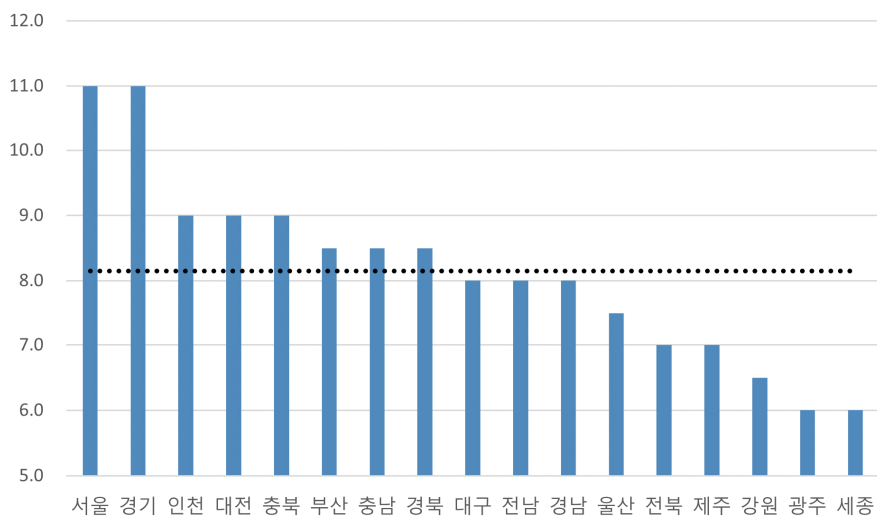


그림 V-7. 평가결과(추진기반의 효율성)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의 평균은 약 9점으로 100점 환산 시 약 75점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각 11점)이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경북·충남(10점)이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인다. 대구·전남·광주·강원·전북·제주(9점)는 평균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경남·세종(8점)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총 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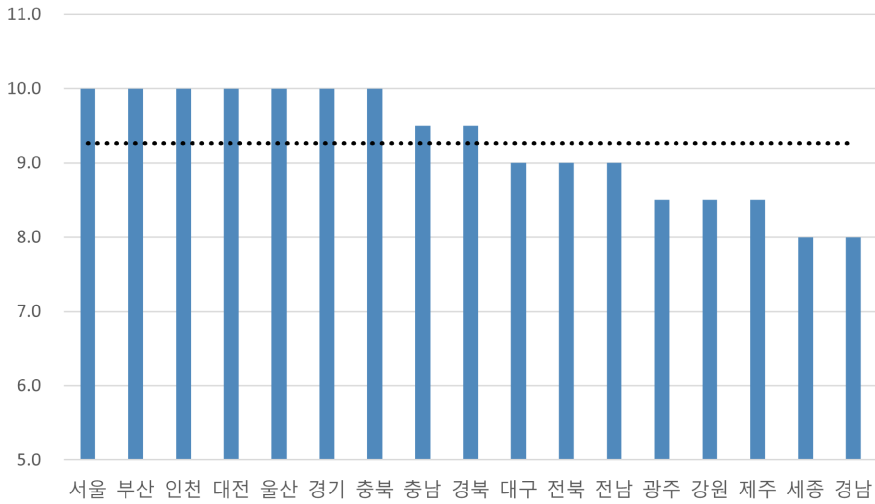


그림 V-8. 평가결과(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총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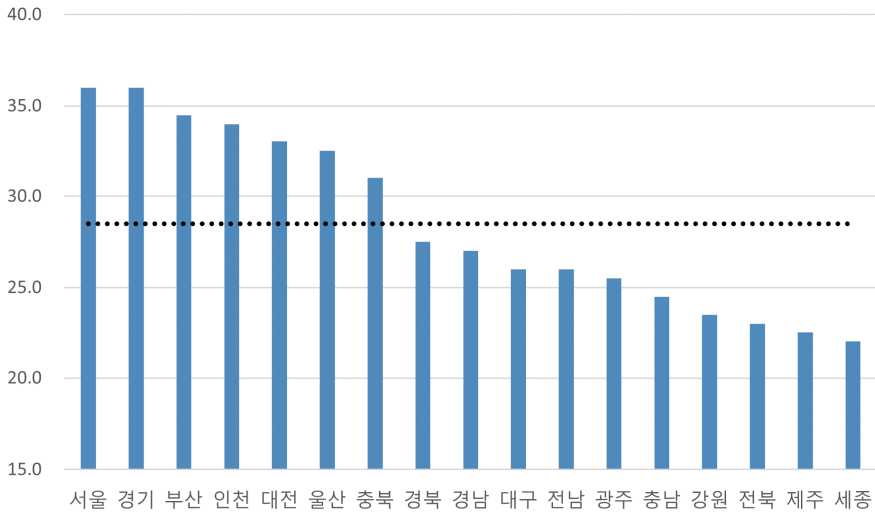


그림 V-9. 평가결과(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의 평균은 29점으로 100점 환산 시 약 73점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각 36점)가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부산(35점)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34점), 대전·울산(각 33점), 충북(31점)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28점)은 평균을 다소 밑돌았으며, 대구·전남·광주(각 26점), 충남(25점), 강원(24점)은 평균을 크게 하회하였다. 특히 전북·제주(각 23점), 세종(22점)은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책목표달성, 정책 효과성 예측 미흡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통해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분석 결과

#### (1) 서울

서울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2>와 같다.

표 V-2. 평가결과(서울)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6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7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정책 집행 (2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7	4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8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8	14
총점			100	86	72

서울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대도시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청년 고용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홍보와 사업 관리의 충실성,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청년고용의 효과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청년·지역·대학·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와 효과 검증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 부산

부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3>과 같다.

표 V-3. 평가결과(부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7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6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7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6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9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6	14
총점			100	85	72

부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지역의 고용환경 및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의 충실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단, 기존의 환경분석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되어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업 추진, 홍보 등은 긍정적이나 향후 정례화된 실질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성과 영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청년의 고용 실현 여부와 청년들의 체감도를 함께 고려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3) 인천

인천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4>와 같다.

표 V-4. 평가결과(인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7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7	14
총점			100	79	72

인천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 인구 현황과 지역 고용 관련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이 정량적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청년·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노력이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외부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시도되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별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가 미비하여,

향후에는 유관기관 간 협력에 기초한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내 인프라와 기업·교육기관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성과가 산출 중심에 머무르고 청년들의 체감 효과나 파급효과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성과지표 도입과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구

대구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5>와 같다.

표 V-5. 평가결과(대구)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4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3	14
총점			100	68	72

대구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지역 청년고용 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립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성과지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청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업 관리와 집행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정책 소통 및 홍보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대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실제 고용성과와 체감적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고용창출이 질적으로도 판단될 수 있도록 효과성 판단의 기준에 질적 측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대전

대전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6>과 같다.

표 V-6. 평가결과(대전)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7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6	14
총점			100	78	72

대전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 지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에 기초한 기획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에서 결과 중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역 규모와 역량에 기반한 차별적 전략 수립이 미흡하여 향후에는 청년고용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성과지표와 차별화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 정례화된 협력체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홍보·소통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내 청년정책 인프라와 기존 자산을 활용하고,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는 주로 산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고용 확대의 실질적 효과나 파급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과 더불어 간접적·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하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6) 광주

광주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7>과 같다.

표 V-7. 평가결과(광주)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4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3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3	14
총점			100	64	72

광주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청년 현황 및 산업·경제 여건을 분석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구체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문제를 반영한 차별적 전략이 미흡하여 향후에는 지역 기반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년고용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관련 기관 간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통 및 공유 방안 구축 및 관련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홍보에 대한 결과분석 및 피드백 강화, 상황 변화에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의 기존 청년정책 인프라와 유관기관 협력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였으며 정책목표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가 주로 산출 중심에 머물고, 정성적·질적 효과 측정과 성과목표치의 근거 등이 미흡하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제시된다. 따라서 정책성과가 실제 청년고용 실현과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과 질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 (7) 울산

울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8>과 같다.

표 V-8. 평가결과(울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6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8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5	14
총점			100	78	72

울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 기업,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구성하여 정책기획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청년의 특수성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차별적 전략이 부족하고,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그 결과의 구체적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지역의 특성과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 추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니터링이 일회성에 머물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례화된 협력과 실질적 피드백 체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산업 인프라와 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 추진 의지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성과 검증이 여전히 산출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정성적 효과나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도입과 함께 청년고용 환경 조성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8) 세종

세종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9>와 같다.

표 V-9. 평가결과(세종)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3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4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3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4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1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1	14
총점			100	57	72

세종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지역의 기본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과목표치와 지표의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협업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역 특성을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수준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 고유의 청년고용 문제를 반영한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고 협업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보와 필요성을 공유하려는 노력 등이 이루어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별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간 소통이 일회성에 머물러 유관 기관 및 주체들 간의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고용과 관련한 여러 대내외적 상세한 상황변화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과 기존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효과의 현실성을 고려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과 검증이 산출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고용의 파급효과나 질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체계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 정성적 성과지표 도입, 그리고 청년고용 확대의 간접적 효과까지 포괄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9) 경기

경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0>과 같다.

표 V-10. 평가결과(경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6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7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8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8	14
총점			100	85	72

경기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대학·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 유관기관 협조체계의 구축, 현황자료와 환경분석 등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설정 근거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양성이 큰 만큼, 차별적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청년고용 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년고용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고용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다양한 사업내용에 따른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과정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업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점과 유관기관·대학·기업과의 협업, 기업 참여 유인체계의 마련 등 성과 실현을 위한 협업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성과는 산출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업 성과의 측정,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지역별 성과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 지역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강원

강원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1>과 같다.

표 V-11. 평가결과(강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3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2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2	14
총점			100	63	72

강원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과 정책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에 따른 결과의 구체성과 의견수렴 반영의 실현성을 높여 계획수립,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청년 대상 홍보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세부 계획수립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정보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의 자원과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 성과는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고, 정성적 효과나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또한 지역 고유의 환경적 제약과 기회 요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라서 기업·지자체·대학 간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청년고용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11) 충북

충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2>와 같다.

표 V-12. 평가결과(충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6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6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5	14
총점			100	77	72

충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제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 및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과 목표와 지표의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반영 정도가 미흡하여 실제 정책에 연결되지 못한 점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의견수렴과 상호교류에 따른 실질적 반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협업체계의 지속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세한 상황변화 분석과 예측 장치가 부족하고, 실질적 협력과 피드백 체계가 약하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례화된 협력체계 구축과 상황 대응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과 협력체제의 활용, 기업과 대학의 참여 의지를 기반으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 관리가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고,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과 질적 성과평가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목표와 지표를 산출과 결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청년고용 정책의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12) 충남

충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3>과 같다.

표 V-13. 평가결과(충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7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4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1	14
총점			100	70	72

충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고용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책계획을 수립한 점과 지역 청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검토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고유의 산업·고용 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설정과 이해관계의 맥락에 대한 검토 과정이 우선 필요하며 참여자 대상 유인체계 구축, 적극적 의견수렴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 준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노력, 홍보와 소통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홍보 및 정보 교류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즉각적 피드백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제시되었다. 이에 정례화된 협력체계 마련, 세부 사업계획 구체화, 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체계적인 집행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의 산업 환경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성과 달성의 가능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와 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이 미흡하고 정성적 성과 측정을 통해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도입, 질적 성과 측정 체계 강화, 후속 효과 관리까지 포함하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13) 전북

전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4>와 같다.

표 V-14. 평가결과(전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3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4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3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2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1	14
총점			100	60	72

전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구성 노력 등은 긍정적이거나, 지역적 특성과 교육기관의 특성화 등에 기초한 차별적 전략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산출 근거의 미흡, 의견수렴 결과의 실질적 반영수준이 낮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과 더불어 성과목표의 정성적·정량적 근거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와 피드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준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정책 홍보 노력 등 사업 관리 체계의 기본적 적절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장치가 부족하고, 소통·홍보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례화된 협력체계 구축, 상황 대응형 모니터링 강화,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피드백 기반 소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청년고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이나 산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성과 목표-지표 간의 연계성 부족, 질적 성과와 파급효과 측정의 미흡함이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결과 중심의 성과검증, 정성적 성과평가 체계 도입,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 등 성과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14) 전남

전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5>와 같다.

표 V-15. 평가결과(전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4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3	14
총점			100	66	72

전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사업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협업과 의견수렴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와 지표 간 연계성과 정성적 평가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마련,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 성과지표의 질적 강화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모니터링이 실질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통 체계 또한 구성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례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실질적 소통 전략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의 산업 환경과 청년 인구 문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주요 주체들의 참여 의지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 성과가 투입·산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과 인과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목표를 결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성적 효과와 부수효과까지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15) 경북

경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6>과 같다.

표 V-16. 평가결과(경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6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5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5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5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5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4	14
총점			100	74	72

경북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대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 수준이 미흡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과 합리적 산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과 성과지표의 질적 보완, 협업 기관 의견의 적극성 실질적 반영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정보의 창출, 환류 등을 통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유인과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례화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업 참여 유인책 마련, 실질적 소통-공유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성과달성을 위한 의지, 지역 내 자산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성도가 산출 중심에 머물러 결과 기반의 효과 검증이 미흡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한 세부 지역 간 격차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과 목표를 결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접적·파급 효과를 포함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지역별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16) 경남

경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7>과 같다.

표 V-17. 평가결과(경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4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4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4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5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4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4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4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3	14
총점			100	65	72

경남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 의지와 청년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고용과 관련한 지역 동향 및 데이터 분석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유관 기관 간 의견수렴의 실질적 반영과 협업의 지속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목표와 지표가 정량 중심에 치우쳐 질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환경분석 강화, 질적 성과지표 보완, 협업 성과의 실질적 정책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청년고용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본적 인식과 소통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정례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별 추진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피드백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모니터링·피드백 시스템 구축,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가용 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적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 등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은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 주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성과 관리가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성적 성과 평가 강화, 파급효과를 고려한 성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 (17) 제주

제주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8>과 같다.

표 V-18. 평가결과(제주)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1)	1-1.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 및 반영 노력	7	5	6
		1-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적극성과 지역특성 반영 및 차별적 계획수립	7	3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7	3	4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4)	2-1. 정책기획 과정 참여의 의견수렴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4	5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6	6	5
정책 집행 (25)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	4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의 적실성과 대응성	8	3	4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2)	4-1. 정책홍보·소통·공유의 충실성	6	5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6	4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	15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10	14
총점			100	60	72

제주 지역의 청년고용정책 산업별 효과성 분석지표 정책분석결과서의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지역 동향과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한 전략 마련과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구체성과 질적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관련 규정 준수와 사업 추진의 이해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주체 간 소통 창구가 충분히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례화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통 및 협력체제 강화, 가용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가 필요하다.

정책성과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자체·기업·대학 등의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과 연계한 정책효과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과 관리가 산출 중심에 머물러 있고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이 미흡하며, 정책의 파급효과와 부수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통해 가시적 고용 성과를 도출하고, 결과 중심(outcome) 평가체계 마련과 부수적 효과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 ○ ————— 제6장 지역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 1.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 2. AHP 조사결과
- 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제언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본 장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 정책분석 결과와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본 조사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2차 신속심의를 거쳐 승인(202506-HR-고유-015)을 받았다.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는 한 전문가가 17개 시도의 모든 사항에 응답할 경우, 수실편지에 달하는 설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조사가 어렵다.

이에 거주지역에 기반한 1차조사 이후 17개 시도가 30개 표본이 미미한 지역은 응답가능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에 충실하여 30개의 응답 수 표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하였다. 이에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의 응답자는 총 376명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2차 신속심의에 제출된 조사설계에 따라 응답 수 표본은 총 528개이며, 152개 응답 수 표본은 전문가가 복수응답이다. 이와 더불어 1인당 2회를 초과하는 복수응답은 없었다. 조사내용은 지역기업에 청년구직자가 필요한 업무스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지역기업의 청년고용활성화의 환경, 청년유인력의 세부 요인 등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특성은 <표 VI-1>과 같다. 전체 사례 수 528 중 남성(n= 378)은 71.6%를 차지하며, 여성(n=150)은 28.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27.7%(n=146), 40대가 41.9%(n=221), 50대가 30.5%(n=161)로,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지역은 서울·부산이 각각 6.4%(n=34), 경기 6.3%(n=53), 대구·인천이 각각 6.1%(n=32)이며, 광주·대전·울산은 모두 5.9%(n=31)이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각각 5.7%(n=30)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고른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1.5%(n=219)로 가장 많고, 박사 졸업 27.3%(n= 144), 석사 졸업 22.2%(n=117), 박사 수료 9.1%(n= 48) 순이다. 업무 경력은 6년 이상이 69.3%(n=66)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5~6년 미만 16.5%(n=87), 4~5년 미만 8.0%(n=42), 3~4년 미만 6.3%(n=33)로 나타났다.

표 VI-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
전체		(528)	100.0
성별	남자	(378)	71.6
	여자	(150)	28.4
연령대	30대	(146)	27.7
	40대	(221)	41.9
	50대	(161)	30.5
근무 지역	서울	(34)	6.4
	부산	(34)	6.4
	대구	(32)	6.1
	인천	(32)	6.1
	광주	(31)	5.9
	대전	(31)	5.9
	울산	(31)	5.9
	세종	(30)	5.7
	경기	(33)	6.3
	강원	(30)	5.7
	충북	(30)	5.7
	충남	(30)	5.7
	전북	(30)	5.7
	전남	(30)	5.7
	경북	(30)	5.7
	경남	(30)	5.7
	제주	(30)	5.7

	구분	사례 수	%
학력	대학교 졸업	(219)	41.5
	석사 졸업	(117)	22.2
	박사 수료	(48)	9.1
	박사 졸업	(144)	27.3
경력	3~4년 미만	(33)	6.3
	4~5년 미만	(42)	8.0
	5~6년 미만	(87)	16.5
	6년 이상	(366)	69.3

## 2. AHP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청년 유인을 위한 정책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였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정성적 판단을 토대로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 형태로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방향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건비 직접지원’, ‘중소기업 간접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계’ 세 가지 정책수단을 비교하여 중요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V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 간접지원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맞춤형 인력 양성이 34.6%, 인건비 직접지원이 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단순한 재정지원보다는 청년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인력 양성 등 간접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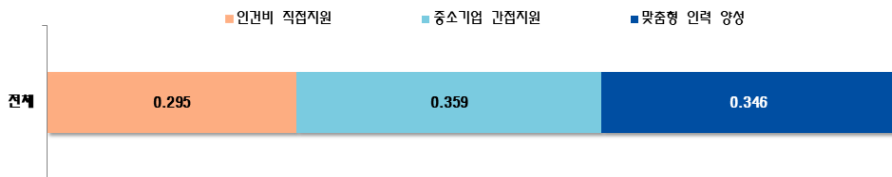


그림 VI-1.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전체)

구체적으로 시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울(51.7%), 대전(45.2%), 울산(49.0%), 충북(52.7%), 경북(47.2%)에서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연구개발 및 제조 기반 산업이 자리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재 양성과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창출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산(36.6%), 대구(43.8%), 인천(54.6%), 세종(41.2%), 경기(48.9%), 충남(44.1%)은 중소기업 간접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기업 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건비 직접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은 광주(39.5%), 강원(40.0%), 전북(62.8%), 전남(55.0%), 경남(37.7%), 제주(4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건비 직접지원과 같은 재정적 보조가 실질적인 청년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의융합형 지역은 중소기업 간접지원(44.7%)이 가장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맞춤형 인력양성(44.2%)의 비중이 매우 높아, 지속가능한 청년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형 지역 역시 맞춤형 인력양성(41.2%), 중소기업 간접지원(41.1%)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어, 기술 인력 확보가 주요 전략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력산업형(37.7%)과 혁신산업형(41.6%) 지역은 단기적 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안정화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조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인건비 직접지원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역별 산업유형을 고려하여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 및 지역유형별)

구분	지원방향	전체	인건비 직접지원	중소기업 간접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
	전체	(528)	.295	.359	.346
시도 구분	서울	(34)	.076	.407	.517
	부산	(34)	.328	.366	.306
	대구	(32)	.400	.438	.162
	인천	(32)	.154	.546	.300
	광주	(31)	.395	.274	.331
	대전	(31)	.148	.400	.452
	울산	(31)	.119	.391	.490
	세종	(30)	.203	.412	.386
	경기	(33)	.147	.489	.364
	강원	(30)	.400	.344	.256
	충북	(30)	.125	.348	.527
	충남	(30)	.250	.441	.309
	전북	(30)	.628	.242	.130
	전남	(30)	.550	.168	.282
	경북	(30)	.307	.221	.472
	경남	(30)	.377	.263	.360
	제주	(30)	.454	.315	.230
	지역유형	창의융합형	(67)	.111	.447
신산업형		(158)	.178	.411	.412
주력산업형		(152)	.377	.308	.315
혁신산업형		(151)	.416	.317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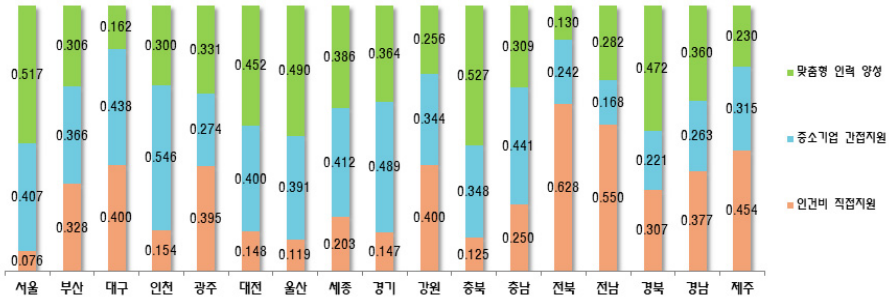


그림 VI-2. 청년고용지원 방향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별)

청년 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혁신환경이 20.3%로 그 뒤를 이었다. 근무환경은 19.7%, 주거·교육·문화·체육·보육 등 생활환경은 19.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교통접근성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핵심 요인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혁신적 생태계 구성에 있음을 시사하며, 근무환경 및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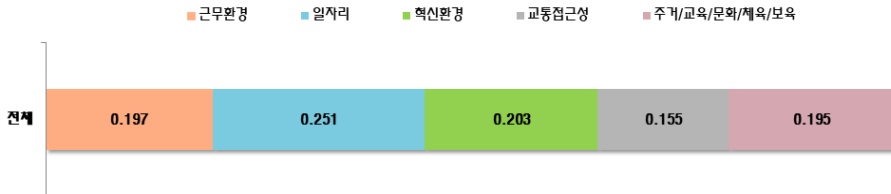


그림 VI-3.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전체)

구체적으로 시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청년 유인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26.5%), 부산(32.5%), 울산(27.8%), 경남(34.7%), 충남(33.6%) 등은 '일자리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제조업 및 산업단지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자리 확대가 청년 유입의 직접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울(26.5%), 부산(32.5%), 대구(27.5%), 인천(23.6%), 광주(28.5%), 울산(27.8%), 경기(26.0%), 충남(33.6%), 경남(34.7%) 등은 '일자리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전(29.3%), 충북(31.3%)은 '혁신환경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창업 생태계, 기술혁신 기반의 산업 구조를 지닌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북(25.5%), 전남(23.3%), 경북(27.1%), 제주(26.5%) 등은 '교통접근성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접근성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가 청년의 직주근접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세종(34.5%), 강원(29.4%) 등은 '주거·교육·문화·체육·보육 등 생활환경 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은 산업 기반보다는 정주 여건이 청년 유입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청년인구의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의융합형 지역은 일자리(26.2%), 주거·교육·문화·체육·보육 등 생활환경 요인(23.1%), 혁신환경(21.6%)의 비중이 높아,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과 정주 여건, 창의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될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산업형 지역은 일자리(26.7%) 혁신환경(25.5%)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첨단산업 및 기술기반 일자리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주력산업형 지역은 근무환경(23.4%)과 일자리(26.1%)의 비중이 높아, 전통 제조업 기반의 근무여건 개선과 청년층 일자리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혁신산업형 지역은 주거·교육·문화·체육·보육 등 생활환경(26.1%)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21.8%)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유형에서는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삶의 질 중심의 지역 정착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청년 유인요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생활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혁신환경, 교통접근성, 생활환경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VI-3.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 및 지역유형별)

구분	자원방향	지역 및 지역유형별					
		전체	근무환경	일자리	혁신환경	교통접근성	주거/교육/문화/체육/보육
	전체	(528)	.197	.251	.203	.155	.195
시도 구분	서울	(34)	.181	.265	.218	.108	.228
	부산	(34)	.234	.325	.202	.137	.102
	대구	(32)	.231	.275	.197	.095	.202
	인천	(32)	.151	.236	.215	.220	.178
	광주	(31)	.209	.285	.187	.105	.215
	대전	(31)	.209	.232	.293	.125	.141
	울산	(31)	.201	.278	.259	.105	.157
	세종	(30)	.128	.200	.191	.137	.345
	경기	(33)	.181	.260	.213	.113	.233
	강원	(30)	.168	.207	.130	.200	.294
	충북	(30)	.193	.260	.313	.110	.124
	충남	(30)	.325	.336	.162	.089	.088
	전북	(30)	.153	.225	.167	.255	.200
	전남	(30)	.208	.169	.164	.233	.227
	경북	(30)	.120	.176	.176	.271	.257
	경남	(30)	.284	.347	.209	.086	.074
제주	(30)	.165	.168	.150	.265	.252	
지역유형	창의융합형	(67)	.181	.262	.216	.111	.231
	신산업형	(158)	.198	.267	.255	.140	.140
	주력산업형	(152)	.234	.261	.182	.154	.170
	혁신산업형	(151)	.165	.218	.165	.192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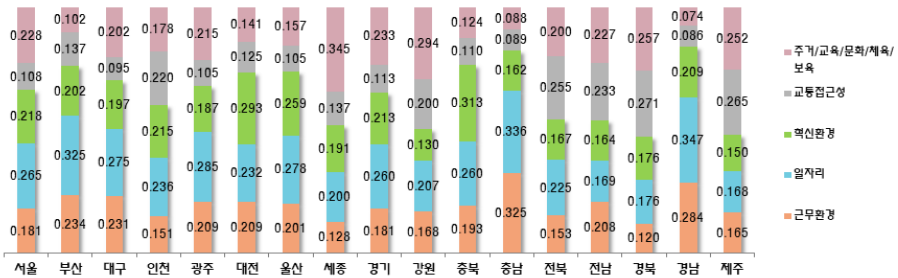


그림 VI-4. 청년유인력 지수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지역별)

### 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미래산업 전략 제언

#### 1) IPA 조사결과 개관(전국)

##### (1) 노동시장 직무역량의 IPA 조사결과

청년구직자들의 직무역량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인식하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5.3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어 능력(5.19), 전공 지식(5.13), 문제해결능력(4.83), 실무경험(4.61), 팀워크/협업 능력(4.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실성(4.48)과 의사소통 능력(4.48)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역량과 관련된 중요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직무역량 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7.23)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무 경험(7.16), 전공 지식(7.15), 성실성(7.08), 외국어 능력(7.05), 문제해결능력(7.05), 팀워크/협업능력(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활용 능력(6.99)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업들은 청년구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구직자의 기술적 역량(디지털 활용, 전공 지식, 외국어 등)은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직 내 협업과 소통, 성실성 등 태도 중심 역량의 부족을 주요 한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년층의 기술적 역량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조직 내 협업 능력과 실무 적응력 제고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구직자들의 실제 역량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의 경험, 문제해결력, 대인 소통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현장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VI-5]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10과 4.83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유지·강화가 필요한 영역에는 전공 지식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전문역량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화교육과 실무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실무 경험과 의사소통 능력이 해당된다. 두 항목은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구직자들의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성실성과 팀워크·협업 능력이 포함된다. 해당 역량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우선순위가 낮으나, 직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디지털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역량은 현재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현장 실무 적용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직무역량 강화는 단순한 기술습득 중심이 아니라, 실무적응력과 소통능력 중심의 역량개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무경험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맞춤형 직무연계교육, 기초역량(성실성, 문제해결능력 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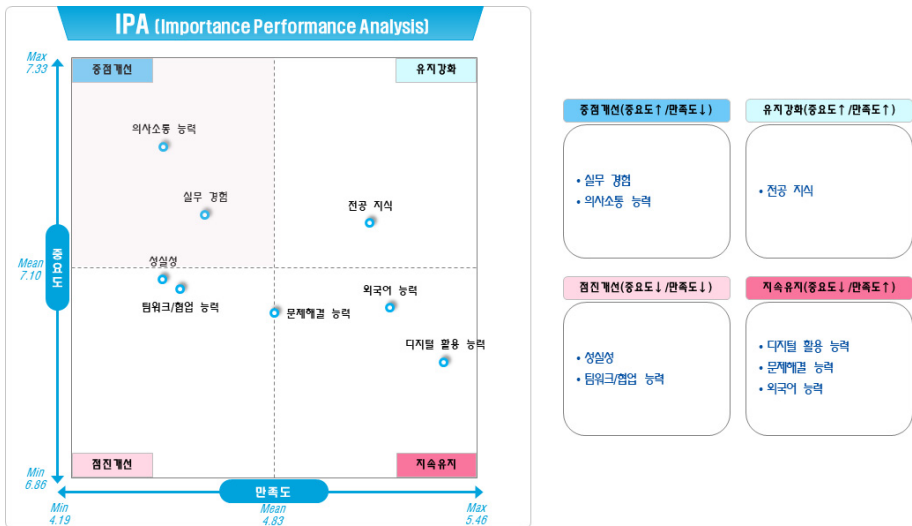


그림 VI-5. 기업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업무스킬 IPA(전국)

## (2)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수준(평균 4.06)으로 나타난 반면,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평균 6.69) 평가되었다.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만족도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50)'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43)',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38)', '고용서비스 지원(4.16)', '청년채용 인건비보조(3.88)',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51)'와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71)'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85)',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80)', '고용서비스 지원(6.6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65)',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62)'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47)'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적 여건 조성 등 간접적 지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 제감도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6]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9와 4.06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이 해당된다. 이들은 기업의 청년 채용확대와 청년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적 운영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체감이 낮아 정책 홍보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해당된다. 해당 정책들은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나 단기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의 장기적 고용 유지나 청년 인재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므로 타 정책들을 통한 보완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해당된다. 두 정책은 현장 만족도가 높아 현재 수준의 운영을 유지하되, 서비스 품질관리와 현장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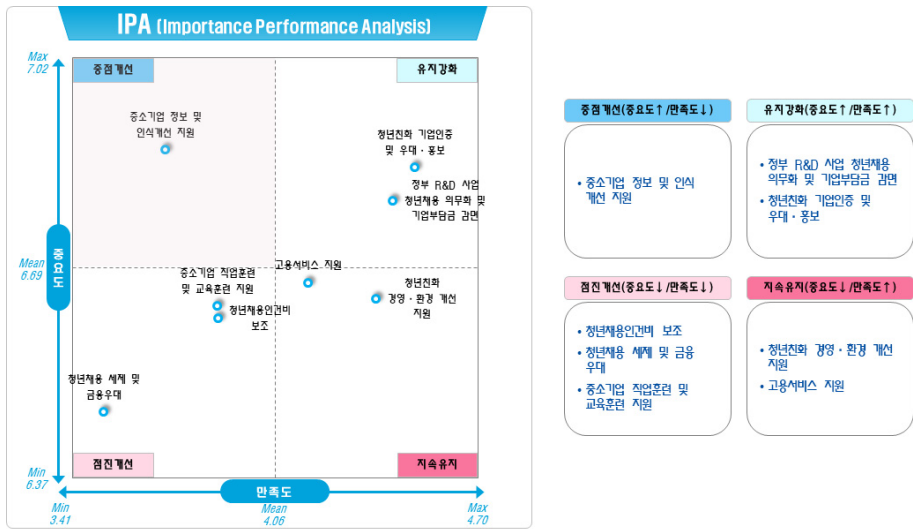


그림 VI-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국)

### (3) 청년유인력지수 재구성요인 IPA 분석결과

청년 유인력 제고를 위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인식하는 만족도는 (평균 4.26), 중요도는 (평균 6.83)으로 평가되어 중요도가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만족도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49)’, ‘교육환경(4.4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43)’,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38)’, ‘근무시설 최신화

(4.29)', '보육인프라(4.18)', '고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9)'와 '교통의 접근성 제고(4.07)', '정주를 위한 주거(4.07)'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7.10)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97)', '근무시설 최신화(6.86)', '문화 및 체육 인프라(6.84)',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84)', '교육환경(6.8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82)',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81)', '정주를 위한 주거(6.7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65)', '보육인프라(6.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생활-정주 인프라(특히 교통)와 산업 경쟁력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지만, 해당 영역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청년 유인력 제고 요인'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7]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82와 4.27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교육환경',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인재 유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교육-산업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증점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 '문화 및 체육 인프라', '고부가가치 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증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생활 여건과 직결된 인프라 영역이다. 따라서, 대중교통망 확충, 청년 맞춤형 문화-여가공간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 '보육인프라'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층의 가족 형성 또는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층의 일-가정 양립과 장기 정주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 환경 도입',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은 정책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기술 혁신 촉진, 스마트 인프라 확산,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의 고도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문화·주거·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향후 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청년친화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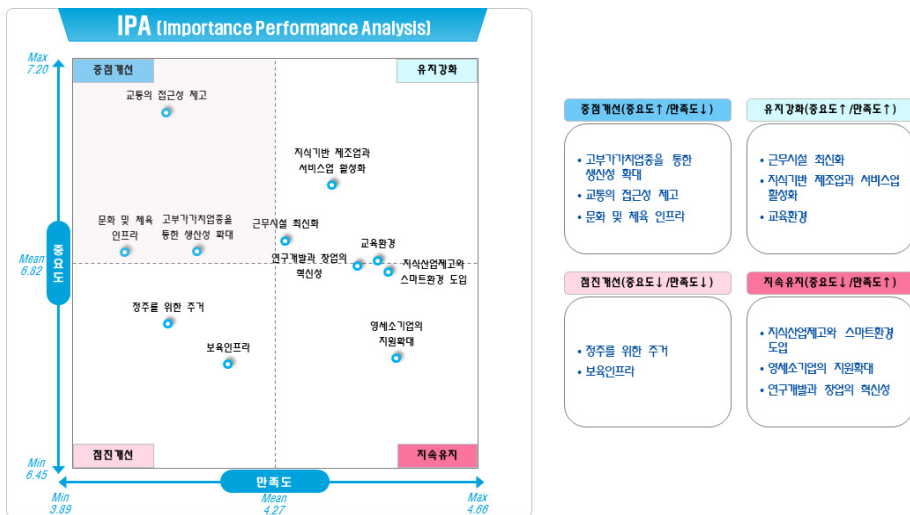


그림 VI-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요인 IPA(전국)

## 2) IPA 조사결과(지역별)

17개 시도의 IPA조사결과는 기업지원정책과 청년유인력지수 요인의 분석 결과를 제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 (1) 서울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서울 지역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35)’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26)’, ‘고용서비스 지원(4.21)’,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12)’, ‘청년해용인건비 보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53)’,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5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38)’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88)’,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62)’,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65)’,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고용서비스 지원(6.35)’,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24)’,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15)’는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8]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54와 3.90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와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적 고용문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기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적 혜택의 차등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된다. 실질적 체감도가 낮은 정책으로서 서울시는 관련 정책의 홍보 강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된다. 두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의 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 고용유지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청년고용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현재 성과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질 관리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 지역 기업들은 청년고용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 재정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청년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직무훈련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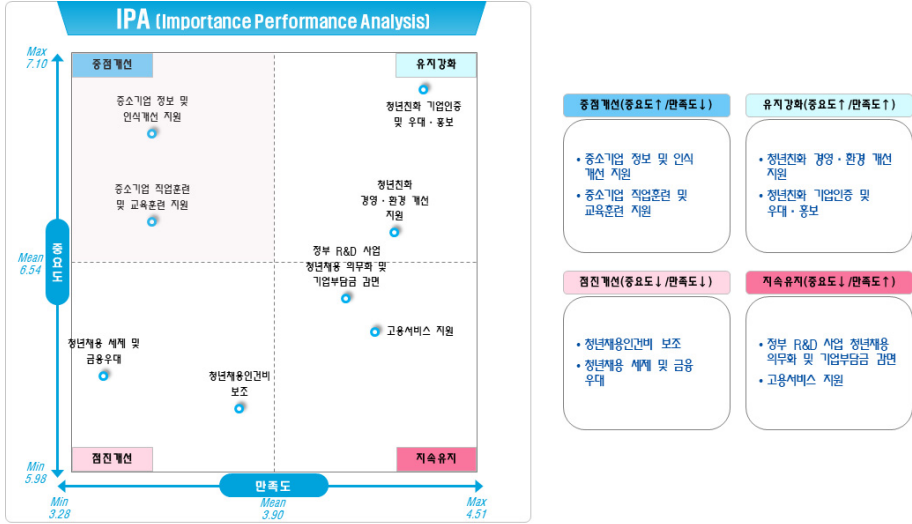


그림 VI-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서울)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서울특별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인프라(4.4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44)’, ‘교육환경(4.38)’, ‘지식산업체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15)’, ‘근무시설 최신화(4.12)’,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3.85)’, ‘정주를 위한 주거(3.82)’,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85)’,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3.68)’, ‘문화 및 체육 인프라(3.59)’, ‘교통의 접근성 제고(3.4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정주를 위한 주거(6.97)’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보육인프라(6.85)’,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82)’,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

신성(6.76), '교육환경(6.74)',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59)', '근무시설 최신화(6.4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4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44)', '교통의 접근성 제고(6.32)', '문화 및 체육 인프라(6.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0과 3.98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9]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교육환경'과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서울이 우수한 교육·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부부의 정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청년가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정주를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특히 주거 부문의 낮은 만족도는 높은 주거비로 인한 청년층의 이탈을 반영하며, 창업 지원의 미비 역시 만족도 저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주거 안정화, 창업 인큐베이팅 강화, 산업 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교통의 접근성 제고',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된다. 이는 교통 혼잡과 여가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 정주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통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가 포함되었다. 서울은 첨단 업무환경 및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은 지식기반 산업과 첨단 서비스업이 집중된 도시로 높은 교육·보육 수준을 강점으로 가지지만, 주거비 부담과 창업·고용 진입장벽이 청년층의 정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기술직 일자리 확대와 직결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 지원, 창업·R&D 연계 프로그램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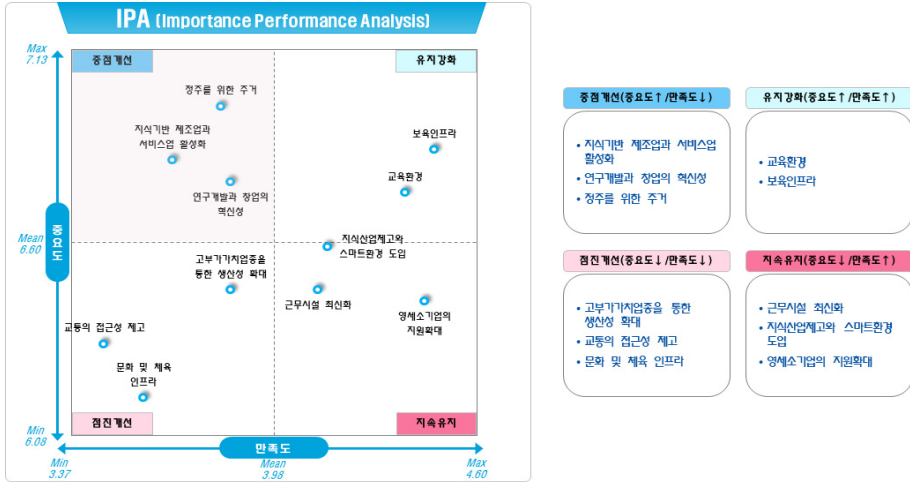


그림 VI-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서울)

## (2) 부산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부산 지역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의 경우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5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50)’, ‘고용서비스 지원(4.4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41)’,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4.38)’,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4.1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82)’과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74)’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2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12)’,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00)’,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97)’, ‘고용서비스 지원(6.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65)’,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5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4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54와 4.25로 이를 바탕으로 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10]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이 해당된다. 해당 정책은 청년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 부산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의 참여 확대와 청년 고용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내 인증기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기업의 참여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책들은 신산업(해양에너지, 친환경선박, 스마트물류 등) 육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R&D 기반 청년 연구인력 확보, 관련 산업 특화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청년 채용인건비 보조’가 포함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된 영역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시사된다. 이에 부산시는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플랫폼 구축)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보조 시 ‘근속 기간’, ‘기술 교육 이수’, ‘청년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수준 향상’ 등의 성과와 연계하여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해당된다. 즉,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기업에서도 다소 중요성과 만족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가 낮음과 동시에 중요도가 낮다는 점에서 단기적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고용서비스 지원’, ‘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부산시는 해당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취업 플랫폼 고도화, 청년 근로자의 복지·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시는 조선·기계·항만물류 중심의 산업, 중소기업체계의 기술인력 요구가 높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인력 구조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 산업별 특화형 인건비 보조 도입, 현장기반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의 고용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환경 개선(작업환경 현대화, 교통·주거·복지 연계 등)과 근속형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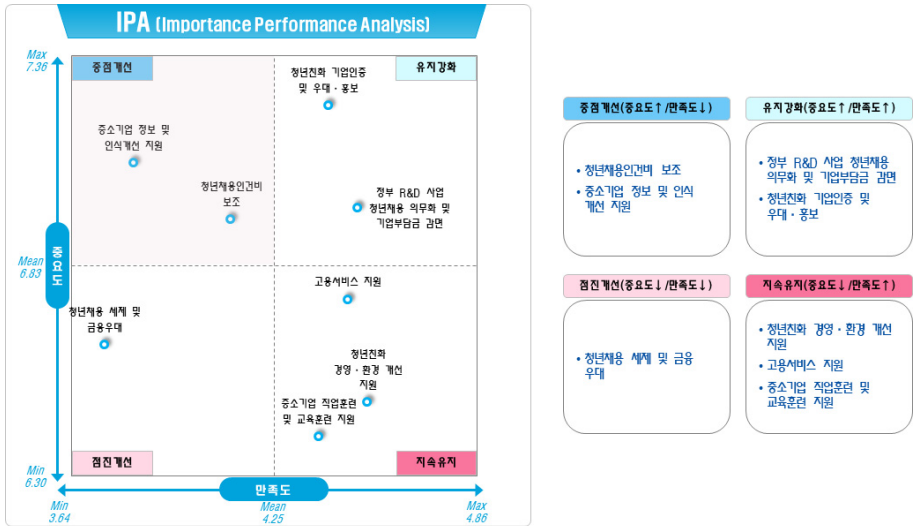


그림 VI-1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부산)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부산광역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5.24)', '교통의 접근성 제고(4.79)', '보육인프라(4.74)',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71)', '영세소기업의 지원 확대(4.65)', '정주를 위한 주거(4.50)', '근무시설 최신화(4.50)', '교육환경(4.21)',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4)',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3.94)'와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8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62)', '정주를 위한 주거(7.26)', '교통의 접근성 제고(7.03)',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0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91)',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85)', '근무시설 최신화(6.59)',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41)', '교육환경(6.18)', '문화 및 체육 인프라(6.00)'와 '보육인프라(5.94)'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71과 4.46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1]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통의 접근성 제고', '정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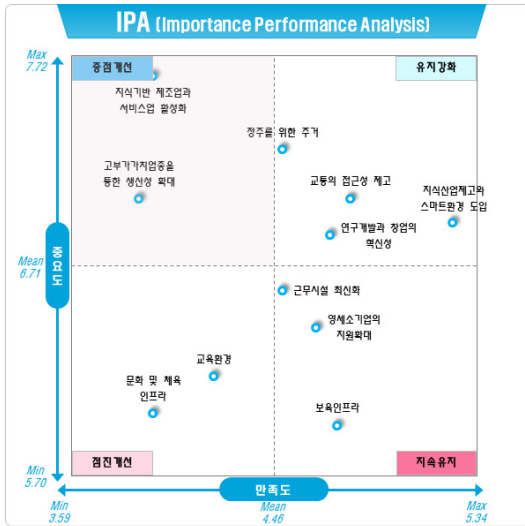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산에서 추진하는 산업구조의 재편(스마트시티 등), 창업 지원정책 등이 청년 정주 및 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부산시는 청년층의 기술 창업 및 전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교통 접근성과 주거 편의성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생활·근무·여가가 조화된 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산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아 지식기반 산업의 규모가 적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산은 미래 첨단제조업,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교육환경'과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부산의 교육·문화 인프라가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낮아, 청년층의 지역 이탈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더불어 신산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인프라 확충을 강화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보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부산광역시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있어 지식기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 등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이 청년 유입과 정착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문화·복지 인프라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산업계고려 스마트환경 도입</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li>교통의 접근성 제고</li> <li>장주를 위한 주거</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환경</li> <li>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무시설 최선화</li> <li>영세소기업의 지원 확대</li> <li>보육인프라</li> </ul>                                  |

그림 VI-1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부산)

### (3) 대구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대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7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4.34)’,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28)’, ‘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3.91)’,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78)’,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78)’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63)’, ‘고용서비스 지원(3.44)’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는 ‘고용서비스 지원(6.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56)’,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50)’,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34)’,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16)’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06)’,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5.81)’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대구 지역 기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인력 매칭과 경영환경 개선 등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30과 3.98로 이를 바탕으로 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12]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이 해당된다. 이에 대구시는 미래 신산업(로봇, 미래차, 의료기기, ICT 융합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이 청년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청년 R&D 인턴십 및 기술혁신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제조·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그리고 청년 맞춤형 직무연계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들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산업-대학-청년을 연계하는 고용생태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해당된다. 따라서 단기적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기술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성과 연계형 인건비 지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된다. 해당 정책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기술교육과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유지 및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구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보다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청년 기술인력 양성, 직무 맞춤형 훈련 강화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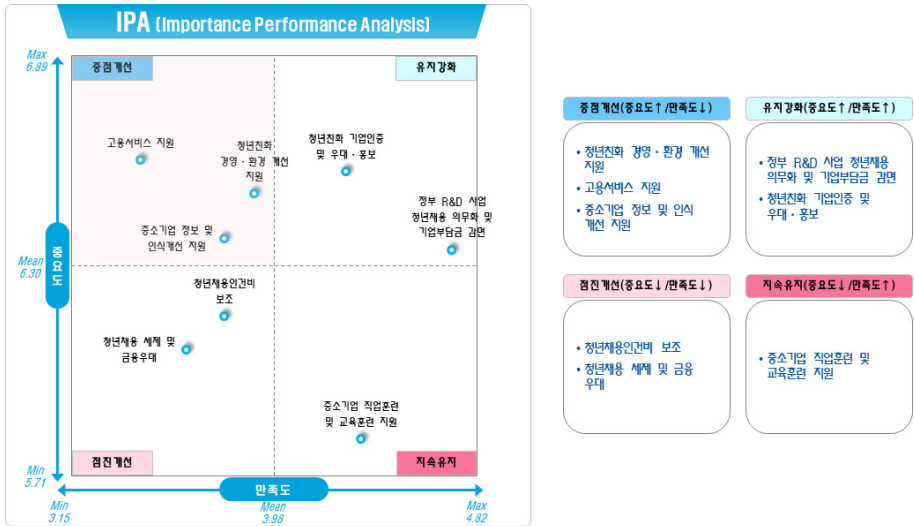


그림 VI-1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대구)

## (2)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대구광역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5.03)'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66)', '교육환경(4.5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4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31)', '정주를 위한 주거(4.28)', 문화 및 체육 인프라(4.00), '교통의 접근성 제고(3.94)',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81)', '보육인프라(3.81)', '근무시설 최신화(3.69)'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근무시설 최신화(6.9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75)',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72)', '교통의 접근성 제고(6.69)', '정주를 위한 주거(6.47)', '보육인프라(6.34)',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31)', '문화 및 체육 인프라(6.25)',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19)', '교육환경(6.19)',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09)'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46과 4.23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3]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와 '정주를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청년층의 정착 여건 개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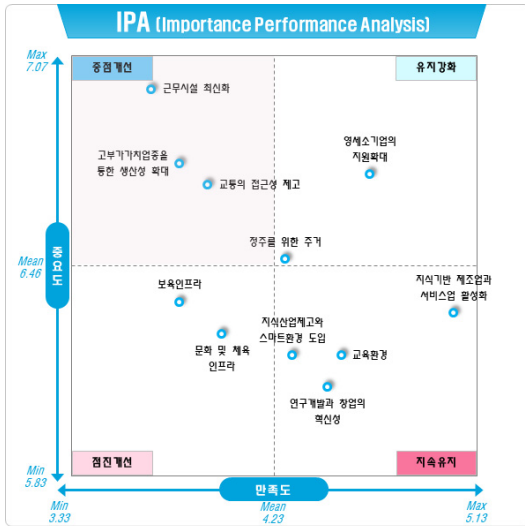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은 청년층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구시는 청년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년주택 건립,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및 경영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교통의 접근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이는 대구의 산업기반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와 근무환경 개선이 청년의 지역이탈 방지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후 작업장 시설 현대화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근로환경의 현대화와 교통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문화 및 체육 인프라’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지역 내 여가공간과 보육시설의 양·질적 수준이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및 청년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시설 확충(청년 문화복합공간, 생활체육시설)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서비스 강화(직장 연계형 보육시설, 시간제 돌봄 지원)가 요구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육환경’이 포함된다. 이는 대구시가 전통 제조업에서 로봇·미래차·의료기기·ICT 융합산업 등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및 R&D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에는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근무·생활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근로환경 개선, 청년 정주여건 강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청년의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시설 최신화</li> <li>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교통의 접근성 제고</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소기업의 지원 확대</li> <li>장주를 위한 주거</li> </ul>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li>보육인프라</li> </ul>                               | <b>유지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산업체고과 스마트환경 도입</li> <li>지역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li>교육환경</li> </ul> |

그림 VI-1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대구)

#### (4) 인천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인천 지역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6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53)’, ‘고용서비스 지원(4.4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4.06)’,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3.9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88)’가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81)’,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78)’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인천의 중소기업이 실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정책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요도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09)’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06)’,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88)’, ‘고용서비스 지원(6.66)’,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53)’,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38)’와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31)’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이 항공·

물류·제조·바이오 산업 중심의 복합 산업도시로서, 기업이 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4]와 같으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7과 4.14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해당한다. 인천시는 해당 영역의 정책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공항·항만·물류·제조업 등 지역 내 산업별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된다. 인천은 제조·항만·공항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기술직 및 전문직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직무 연계형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대학-청년 연계형 홍보 캠페인, 스마트제조·항공정비·물류자동화 등 지역 핵심산업 중심의 청년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성과연동형 인건비 지원모델이나 항공·바이오·친환경 산업 등 성장산업군을 중심으로 청년 R&D 인턴십과 기술직 장기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으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청년·기업 간 매칭 고도화, 지역산업 기반 맞춤형 취업 플랫폼 강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인천시는 항공·물류·제조·바이오 등 복합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단기적 재정지원보다 산업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 인재양성 및 장기고용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점개선 영역을 중심으로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직무역량 기반의 청년 직업훈련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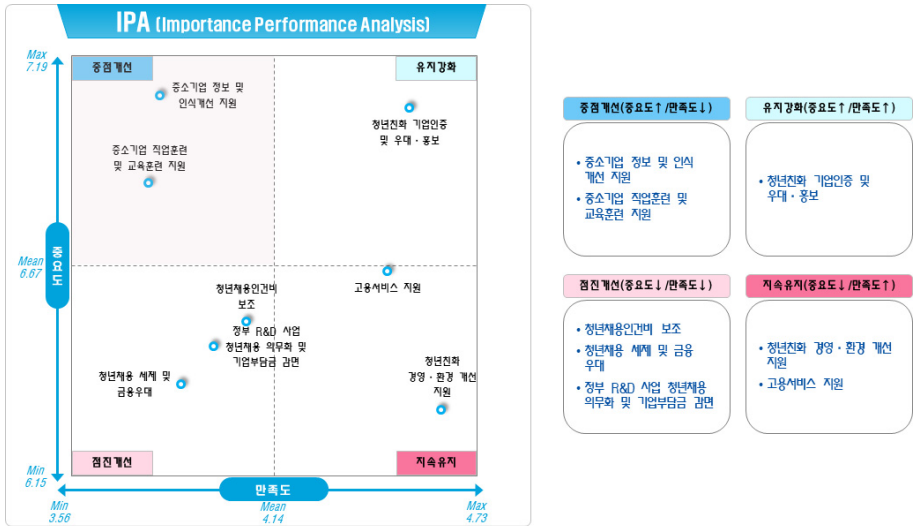


그림 VI-1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인천)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인천광역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보육인프라(4.8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47)', '교육환경(4.34)', '교통의 접근성 제고(4.25)',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22)',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22)', '근무시설 최신화(3.97)',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4)', '정주를 위한 주거(3.69)',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78)',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3.75)'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통의 접근성 제고(7.1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09)', '보육인프라(7.03)', '근무시설 최신화(6.91)', '교육환경(6.88)', '정주를 위한 주거(6.84)',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78)',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69)',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53)', '문화 및 체육 인프라(6.31)',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76과 4.13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5]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교통의 접근성 제고', '교육환경',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인천이 신산업 중심의 인프라와 수도권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기 때문이며, 교육·복지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감소, 교육·보육 서비스 질 향상 등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정주를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이는 낙후된 제조업 중심의 근무환경을 지식·스마트 환경으로 전환하는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직주근접성이 높은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항만,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고용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의 활성화와, 청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영세소기업 지원정책의 질관리, 창업보육센터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연계 강화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인천시는 청년층의 정주를 위해 주거부담 완화, 지식기반 제조업·서비스업 전환과 근무환경 개선, 교통 및 보육 인프라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후 산업환경의 스마트화,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은 청년의 지역 정착 의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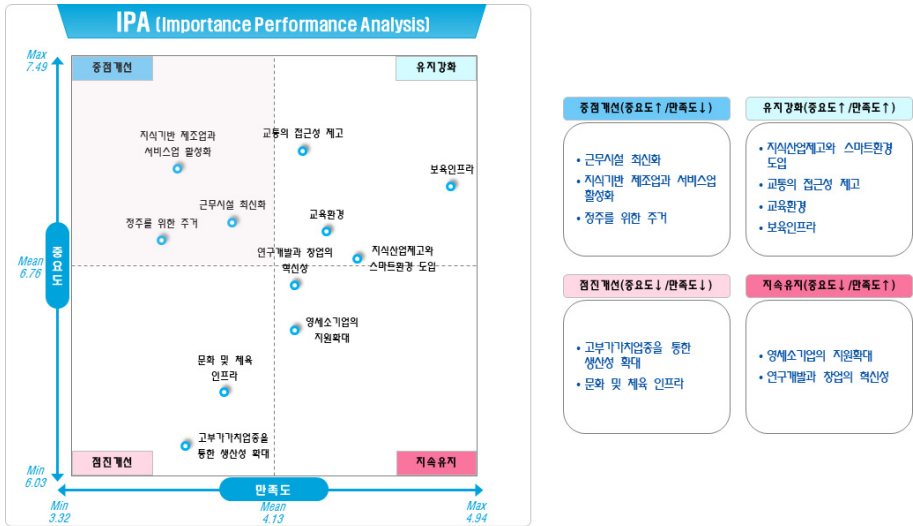


그림 VI-1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인천)

### (5) 광주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광주시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6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58)’, ‘고용서비스 지원(4.39)’, ‘청년친화 기업 인증 및 우대·홍보(4.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7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74)’,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우대(3.39)’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우대(7.06)’,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90)’, ‘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6.71)’, ‘고용서비스 지원(6.48)’,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23)’,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1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주시 내 기업들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정부연계형 인력지원사업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6과 4.10으로 나타났고 IPA 분석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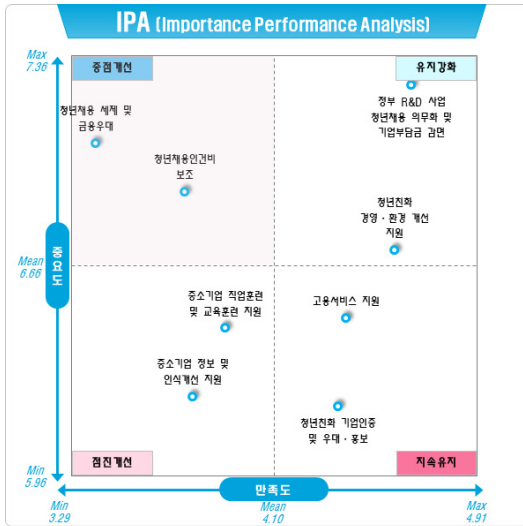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VI-16]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해당 정책은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AI 융합 산업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청년 연구,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한 청년 R&D 인턴십 프로그램, 미래형 모빌리티 및 에너지산업 청년 전문인력 양성 체계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현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된다. 이는 기업에서 청년 인건비 보조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광주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된다. 이들 항목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술집약형 산업이 성장 중인 만큼, 현장 중심형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 및 정보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와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고용서비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을 관리하고, 지역으로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정착프로그램과의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책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년친화인증은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종합하면, 광주시는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자동차·에너지·AI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산업별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개선으로 도출된 재정지원 정책 또한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성과와 연계한 제도 운영 등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창출을 위한 지·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친화경영 환경 조성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채용인건비 보조</li> <li>• 청년채용 연계 및 금융 유대</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li> <li>• 장년진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 개선 지원</li> <li>•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년진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li>• 고용서비스 지원</li> </ul>                         |

그림 VI-1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광주)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광주광역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81)’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환경(4.7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65)’,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45)’,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26)’, ‘근무시설 최신화(4.23)’, ‘정주를 위한 주거(3.90)’,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3.84)’, ‘문화 및 체육 인프라(3.81)’, ‘교통의 접근성 제고(3.71)’, ‘보육인프라(3.52)’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육환경(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 인프라(6.8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81)’, ‘교통의 접근성 제고(6.81)’,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74)’,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71)’,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58)’, ‘근무시설 최신화(6.48)’,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45)’, ‘보육인프라(6.39)’, ‘정주를 위한 주거(6.32)’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4와 4.18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7]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교육환경’이 포함되었

다. 이는 광주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AI 융합 산업 기반 구축, 교육 인프라 확충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산업·교육 기반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적 투자를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교통의 접근성 제고’,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 기반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접근성과 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확충 등이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요도가 낮게 인식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법률 컨설팅 제공,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청년 부부 대상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광주시는 해당 정책의 질을 유지 또는 제고하며,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광주시는 인공지능·친환경 산업 중심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와 청년 생활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식기반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은 청년의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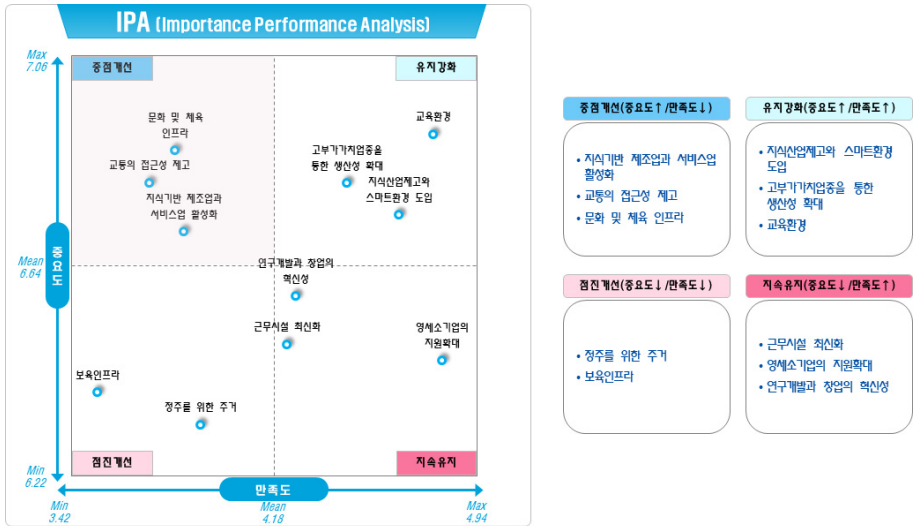


그림 VI-1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광주)

## (6) 대전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대전 지역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7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35)’, ‘고용서비스 지원(4.13)’,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3.65)’, ‘청년채용인건비 보조(3.61)’,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45)’,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32)’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29)’,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7.10)’,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97)’, ‘청년채용인건비 보조(6.77)’,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55)’, ‘고용서비스 지원(6.1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전 지역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중심 산업과 연계된 정부 지원사업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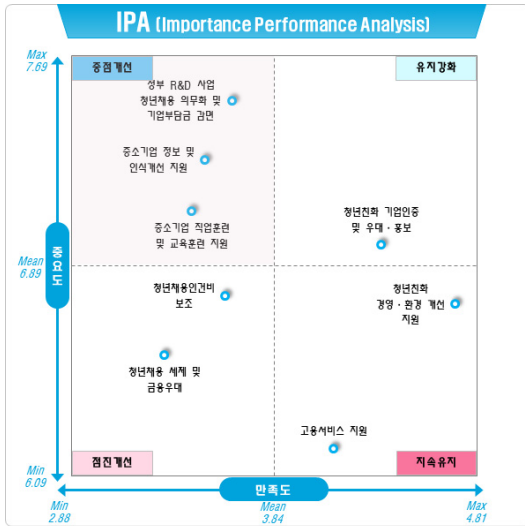
중요도-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8]과 같으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89와 3.84로 나타났다.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 지역 내 혁신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 강화, 우수 인증기업 사례의 확산을 통해 청년친화적 고용문화 정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된다. 대전은 R&D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기술 개발을 사업화하여 청년고용창출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전시는 R&D 연계형 청년 인턴십 제도 운영, 연구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청년층이 기술 기반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사업화 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된다. 단기적 재정지원 정책은 대전의 고기술 중심 산업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 방식으로 단순 지원보다는 청년연구인력 지속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강화, 성과 기반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고용 연계 서비스와 산업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대전은 공공연구기관과 첨단산업 중심의 R&D 도시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연구개발 기반의 청년 인재양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협력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인식개선 등을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경면</li> <li>• 중소기업 정보 및 인력 개선 지원</li> <li>•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li> </ul> | <b>유지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ul>                    |
| <b>점진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채용인건비 보조</li> <li>•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 우대</li> </ul>  | <b>지속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li> <li>• 고용서비스 지원</li> </ul> |

그림 VI-1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대전)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대전광역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교육환경(5.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식산업 체고와 스마트환경 도입(5.03)', '근무시설 최신화(4.71)', '교통의 접근성 체고(4.71)', '보육인프라(4.48)',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42)',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52)', '정주를 위한 주거(3.84)',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3.68)', '문화 및 체육 인프라(3.61)',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52)'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근무시설 최신화(6.90)'와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90)'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71)',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68)', '교통의 접근성 체고(6.48)', '지식산업체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42)', '문화 및 체육 인프라(6.32)', '정주를 위한 주거(6.16)', '보육인프라(6.13)',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10)', '교육환경(6.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44와 4.33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9]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교통의 접근성 체고'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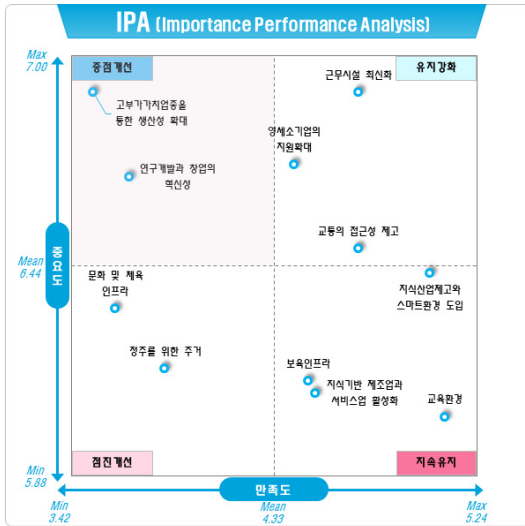
시는 개방형 협업공간 구축과 같은 기업 근무환경 개선, 주요 인구 밀집지역과 산단 내 교통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대전이 연구개발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전시는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창업 연계 강화, 대학 실험실 기반 청년창업 활성화 등 창업 진입장벽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기반 확충 등 정책적 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교육환경’,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대전이 이미 지식기반 산업 전환과 스마트 환경 조성,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전시는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과 보육·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청년 인재 양성과 가족 단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대전시는 연구개발 중심 도시로서, 기술 혁신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통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무시설 최신화</li> <li>중소기업의 지원 확대</li> <li>교육의 접근성 제고</li> </ul>                         |
| <b>중점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주를 위한 주거</li> <li>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산업체고용 스마트환경 도입</li> <li>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교육환경</li> <li>보육인프라</li> </ul> |

그림 VI-1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대전)

## (7) 울산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울산 지역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의 경우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97)’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55)’,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35)’, ‘고용서비스 지원(4.23)’,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84)’,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77)’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29)’과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16)’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3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29)’,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0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97)’, ‘고용서비스 지원(6.90)’,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58)’,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45)’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울산 지역의 기업들이 기술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88과 4.02로 이를 중심으로 한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0]과 같다. 우선 유지강화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 ‘고용서비스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 과정에서 청년 기술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R&D 연계형 청년고용 프로그램과 기술기반 기업의 청년친화 인증 확대를 통해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된다. 울산은 제조업 기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식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현장형 직무훈련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된다. 이들 정책은 단기 재정지원의 성격이 강해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실질적 고용촉진 효과는 낮아 기업 관점에서 체감도가 낮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포함된다. 울산의 주력 제조업이 점진적으로 신산업(스마트팩토리, 수소 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울산시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친환경·스마트 제조산업으로 전환 중인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기업지원정책 또한 미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수립·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점개선영역으로 도출된 중소기업 인식 제고,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훈련체계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R&D 중심의 청년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고용의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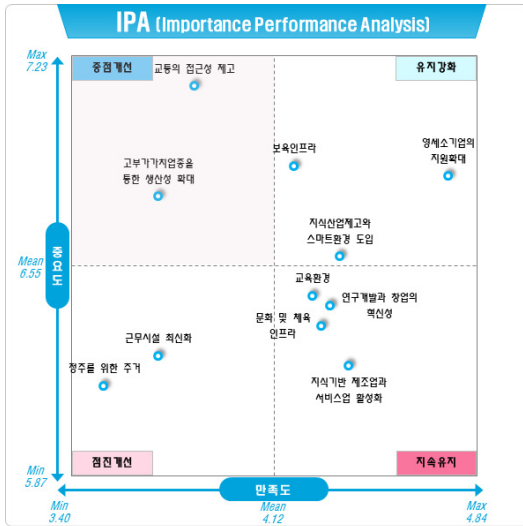
의 주력 산업 구조가 조선·자동차·화학 등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울산시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가족단위의 청년 정주여건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교통의 접근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므로, 향후 울산시는 교통 인프라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와 ‘정주를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근무환경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고, 직주근접성이 청년층의 유인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청년임대주택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육환경’,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울산시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교육 시설의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울산광역시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교통의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층의 이동 편의성과 직주근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고통의 접근성 제고</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li> <li>보육인프라</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시설 최산화</li> <li>정주를 위한 주거</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li>교육환경</li> <li>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그림 VI-2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울산)

## (8) 세종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세종시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53)’과 ‘고용서비스 지원(4.53)’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43)’,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4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93)’, ‘청년채용인건비 보조(3.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57)’와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53)’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23)’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어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7.00)’,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93)’,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73)’, ‘고용서비스 지원(6.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50)’와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40)’,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3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71과 4.09로 이를 중심으로 한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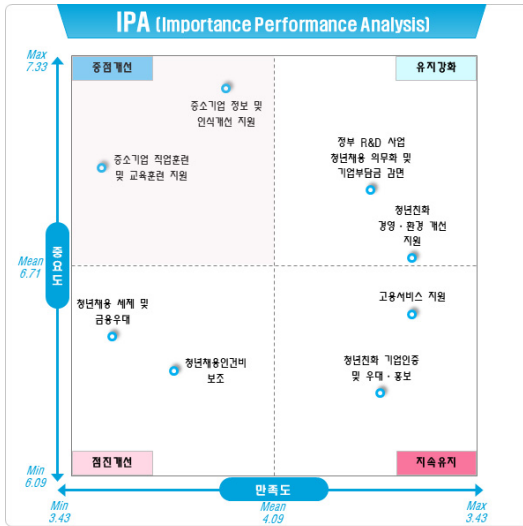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2]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 기인한 결과로서 향후 세종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R&D 연계형 일자리 창출, 청년층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된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 도시로서 공공 행정 및 서비스업 중심의 독특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문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기업지원정책이 제조·기술 기반의 실질적 인력양성보다는 제도적 지원에 치중되면서, 중소기업 인식 제고와 기술훈련 등 현장 중심 정책의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중소기업의 민간 일자리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된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지원정책은 기업 관점에서 장기적인 청년 고용에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인건비 지원 방식의 전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와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청년층의 행정·공공기관 취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중심의 청년친화기업의 사례 확산 등을 수행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청년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세종시는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도시로서 청년고용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제도적 지원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현장 실무역량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 개선 지원</li> <li>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R&amp;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관련</li> <li>청년친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li> </ul> |
| <b>개선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채용 인건비 보조</li> <li>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li>고용서비스 지원</li> </ul>                         |

그림 VI-2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세종)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50)', '근무시설 최신화(4.37)', '고부가가치 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30)',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2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20)', '정주를 위한 주거(3.87)', '교육환경(3.83)', '보육인프라(3.70)', '문화 및 체육 인프라(3.63)', '교통의 접근성 제고(3.53)' 순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분석 결과, '문화 및 체육 인프라(7.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고부가가치 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03)', '교육환경(7.00)',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80)', '교통의 접근성 제고(6.80)',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7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60)', '보육인프라(6.53)', '정주를 위한 주거(6.40)',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37)', '근무시설 최신화(6.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72와 4.0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23]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종이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첨단 산업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의 원천 기술이 지역 기업으로 신속하게 이전 및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료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 '교육환경',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세종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이 부족하며, 교육 및 문화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편의성을 제고하고,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 여가·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세종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거문제는 일정 수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육아·보육 지원의 생활권 중심 확대가 요구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산업제고 및 스마트환경 도입',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 강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강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중심도시로서 교통·문화·주거 등 생활 인프라의 발전 속도가 산업 성장에 비해 더딘 편이다. 따라서 '교통의 접근성 제고', '교육환경',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자리 창출, 창업·연구 중심 생태계 조성을 병행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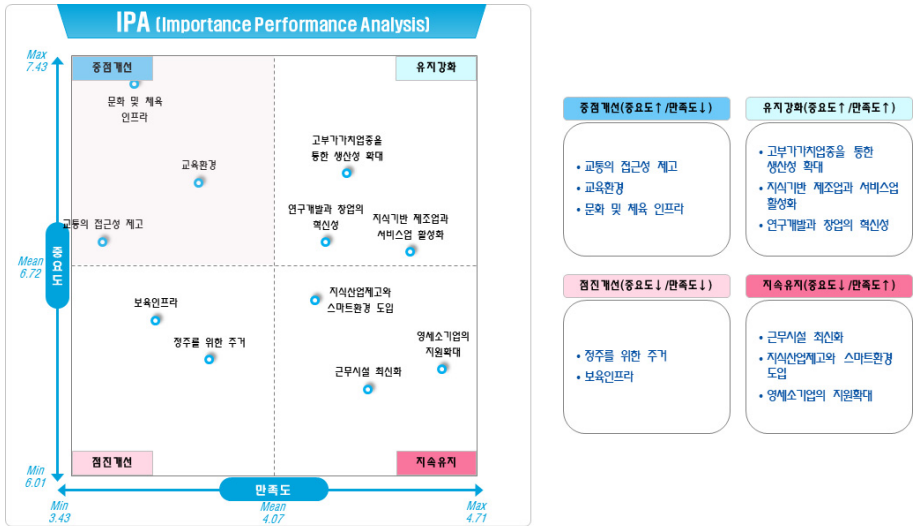


그림 VI-2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세종)

## (9) 경기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경기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67)’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39)’과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39)’,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52)’,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48)’, ‘고용서비스 지원(3.6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30)’,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우대(3.06)’은 낮은 만족도를 보여 기업 관점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85)’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73)’,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70)’, ‘고용서비스 지원(6.6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61)’,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42)’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우대(6.27)’,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0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은 각각 6.54와 3.81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4]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청년친화기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용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된다. 이들 항목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장 맞춤형 직무훈련 확대, 청년취업박람회, 채용 및 고용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인건비 보조는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 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이 포함된다. 경기도의 첨단기술산업 및 연구개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산학연 공동채용 프로그램, R&D 연계형 청년인턴십 제도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산업별 청년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와 장기고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제조업·지식서비스 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며 일자리의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단,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일자리 질적 불균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 인식 제고, 산업 현장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문화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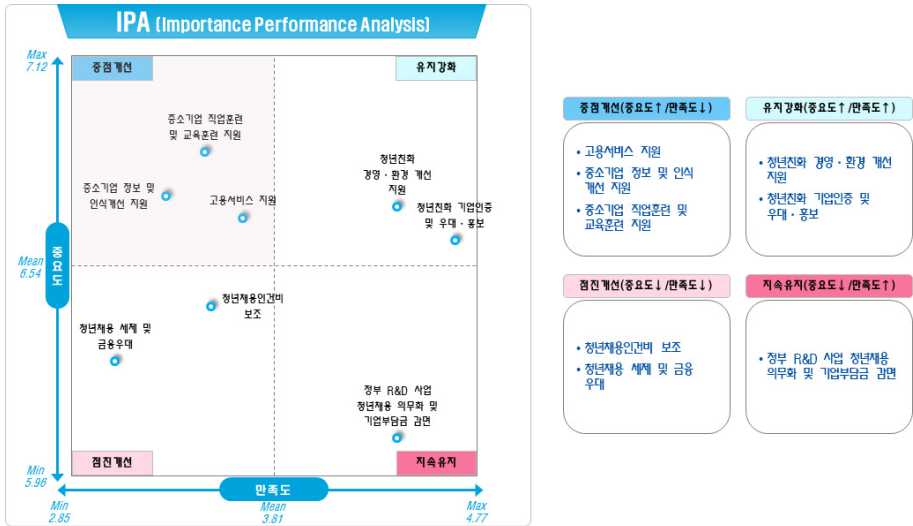


그림 VI-2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기)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경기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48)', '보육인프라(4.45)', '교육환경(4.42)', '교통의 접근성 제고(4.33)', '근무시설 최신회(4.30)',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27)',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4)',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3.85)', '정주를 위한 주거(3.82)',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3.73)',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48)'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7.24)', '교육환경(7.15)',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7.12)', '정주를 위한 주거(7.12)', '교통의 접근성 제고(7.06)',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7.03)', '근무시설 최신회(6.82)',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67)', '문화 및 체육 인프라(6.64)', '보육인프라(6.52)'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97과 4.10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25]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통의 접근성 제고',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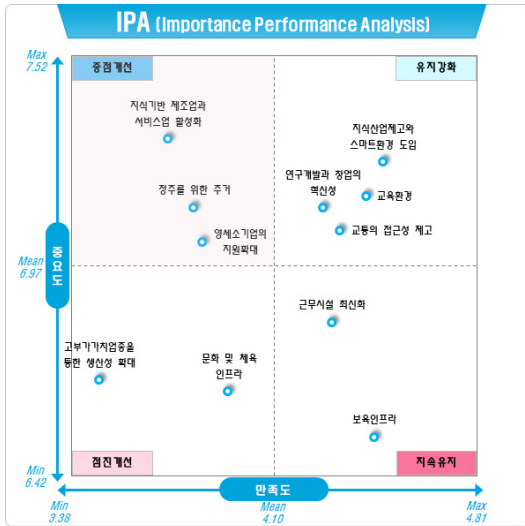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 산업 기반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는 R&D 중심 산업 생태계 고도화, 광역 교통체계 개선, 대학·연구기관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정주를 위한 주거’가 포함되었다. 이는 일자리의 양적 수준은 확보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청년 채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수도권 내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정주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이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식기반, 첨단제조업 등으로의 산업 구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도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여가 공간의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년 참여형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생활권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경기도가 근무 환경의 현대화와 보육 시설의 수, 접근성 등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 경기도는 향후 정기적인 유지 보수 등을 통한 근무시설 최신화와 육아 친화형 복지제도 확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경기도는 산업과 교통,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주거 안정성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근로 여건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병행하여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소기업의 지원 확대</li> <li>•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 정주를 위한 주거</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체고용 스마트환경 도입</li> <li>• 연구개발과 장원의 혁신성</li> <li>• 교통의 접근성 제고</li> <li>• 교육환경</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 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 ↓ / 만족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무시설 최선화</li> <li>• 보육인프라</li> </ul>   |

그림 VI-2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기)

## (10) 강원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강원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5.10)’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5.00)’, ‘청년친화 기업 인증 및 우대·홍보(4.87)’, ‘고용서비스 지원(4.67)’,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9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6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5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청년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으로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1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7.0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93)’,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8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77)’, ‘고용서비스 지원(6.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2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2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원도가 전통 제조업과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첨단산업단지 및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기반

일자리 수요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은 각각 6.74와 4.32로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6]과 같다. 중요도,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강원도는 의료바이오, 수소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연계한 R&D 인턴십 제도와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친화기업의 육성 정책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은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정책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지역 대비 강원도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 체감도가 낮아 지원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년의 지역 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진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여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 강화하여 청년층의 현장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청년고용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강원도는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하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 맞춤형 청년고용 기반 조성 청년친화기업 확산, 고용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향후 지역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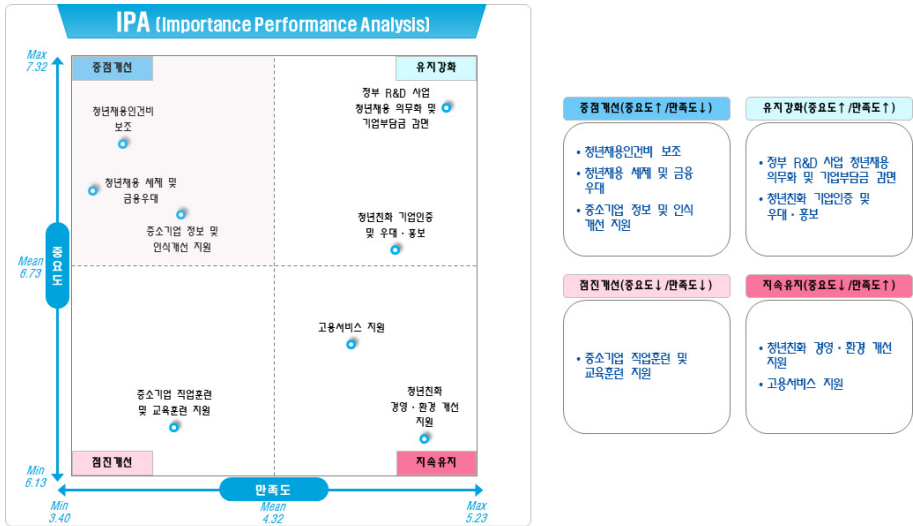


그림 VI-2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강원)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강원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9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87)’, ‘교육환경(4.8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77)’, ‘근무시설 최신화(4.73)’,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70)’,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67)’, ‘보육인프라(4.23)’, ‘교통의 접근성 제고(4.10)’, ‘문화 및 체육 인프라(4.07)’, ‘정주를 위한 주거(4.03)’,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의 접근성 제고(6.90)’, ‘문화 및 체육 인프라(6.80)’,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73)’, ‘교육환경(6.70)’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57)’, ‘보육인프라(6.47)’,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43)’, ‘근무시설 최신화(6.40)’,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27)’, ‘정주를 위한 주거(6.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0과 4.54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27]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고부가가

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교육환경'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의료·바이오,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바이오·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영세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산학연 협력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강원도의 지리적 분산성과 낮은 수도권 접근성, 청년층의 여가문화 인프라 부족이 청년이 지역 정주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 내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연계 교통개선을 통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권 중심의 청년문화공간과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와 지역 정착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가구 중심 정책의 미비로 인해 주거 및 육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타 지역 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 및 생활편의 인프라의 불균형이 청년층의 정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주거·보육 지원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강원도가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야 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 및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강원도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 및 문화 인프라의 부족은 청년 정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기반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청년 생활·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영세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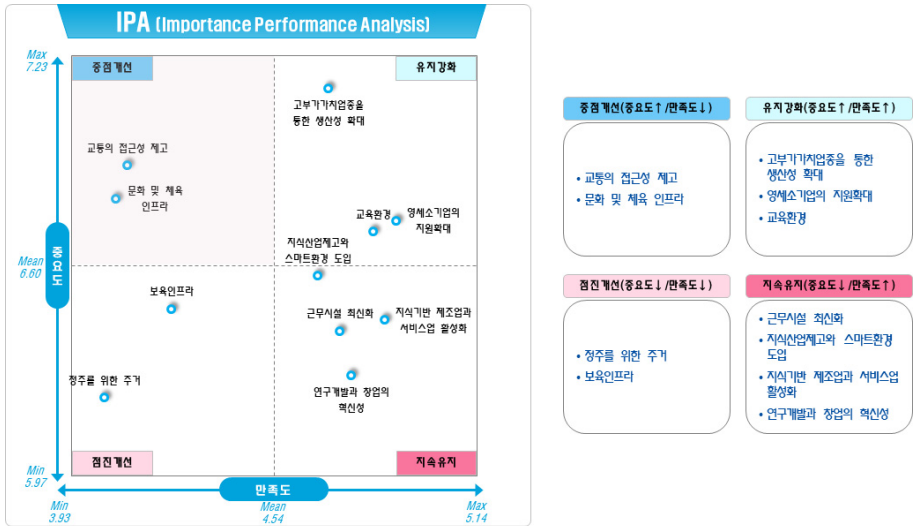


그림 VI-2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강원)

(11) 충북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충청북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27)’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03)’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03)’,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8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6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50)’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서비스 지원(3.43)’과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20)’은 만족도가 타 정책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13)’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07)’과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90)’, ‘고용서비스 지원(6.90)’,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67)’,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43)’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에 위치한 두 정책은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3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13)’으로 타 정책 대비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충북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청년친화적 기업환경과 인력양성 체계가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70과 3.75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8]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충북은 반도체 및 바이오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친화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용서비스 지원'과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정책이 해당한다. 이는 충북의 지역 산업단지 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강화,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로 나타났다. 충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임금·복지 경쟁력이 낮은 편이지만, 단기적 인건비 보조나 세제지원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책은 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의 신산업 구조에 부합한 청년인턴십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청년 기술인력 유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실제로 지역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중점개선 영역에서 도출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서비스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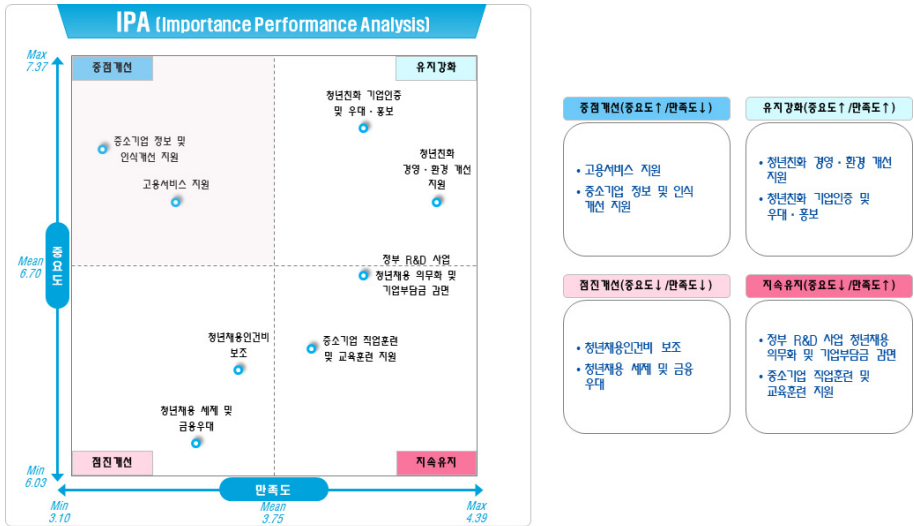


그림 VI-2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총복)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충청북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60)', '보육인프라(4.50)', '정주를 위한 주거(4.40)', '근무시설 최신화(4.3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3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30)',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27)',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7)', '교통의 접근성 제고(3.8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77)', '교육환경(3.5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통의 접근성 제고(7.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0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8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7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70)', '보육인프라(6.50)', '근무시설 최신화(6.43)', '정주를 위한 주거(6.30)', '교육환경(6.27)', '문화 및 체육 인프라(6.23)',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17)'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59와 4.1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29]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충북은 ICT융합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신교통·항공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R&D 중심의 청년창업 지원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교통의 접근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이는 충북 내 제조기반 기업에서 미래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교통의 편의성이 낮은 점 등이 지역 성장과 청년의 정주 및 취업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신산업으로 구조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철도·도로 등 광역 및 지역 내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교육환경'과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내 청년층이 체감하는 문화여가 및 학습 환경이 수도권 대비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생활권 내 문화·체육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며, 청년 커뮤니티 중심의 여가 인프라를 확충과 지역 예술인 및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허',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정주를 위한 주거',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청년층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공간 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와 보육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는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첨단소재·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철도 및 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을 병행하여 청년층이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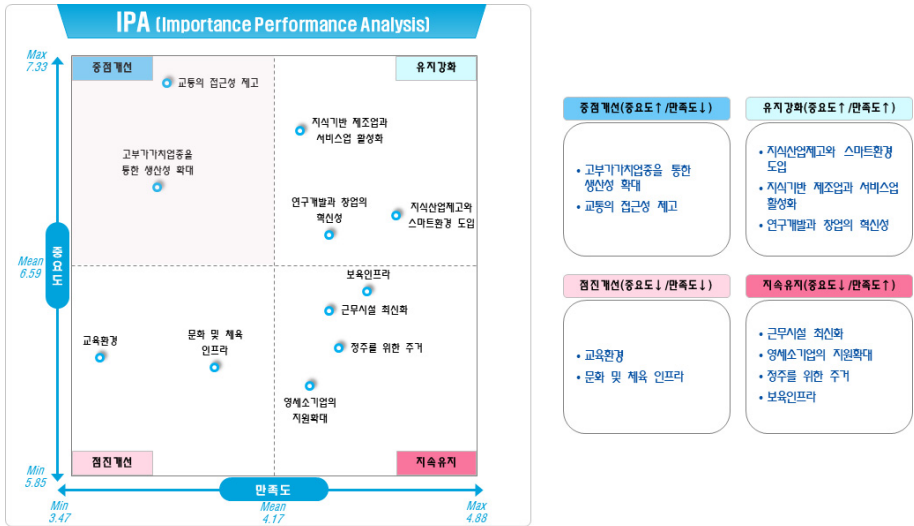


그림 VI-2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충북)

## (12) 충남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충청남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4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4.3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20)’,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1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8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73)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 지원(3.6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47) 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77)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6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63)’, ‘고용서비스 지원(6.5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27)’,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3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20)’,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46과 3.9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0]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로 나타났다. 충남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R&D 연계형 청년채용 프로그램과 청년친화 인증제도를 지속 강화하여 청년인력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는 '고용서비스 지원'과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해당하였다. 이는 충남 지역의 고용시장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현상과 정보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 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의 효율화, 기업-청년 간 정보 접근성 향상, 청년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으로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복리후생이 열악하여 단기 재정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워 단발성 고용에 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충남은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신산업 기술분야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청남도는 전통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 속에서 첨단소재, 반도체, 수소산업 등으로 산업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인식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제고와 고용서비스의 내실화는 기술인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청년친화 기업문화 확산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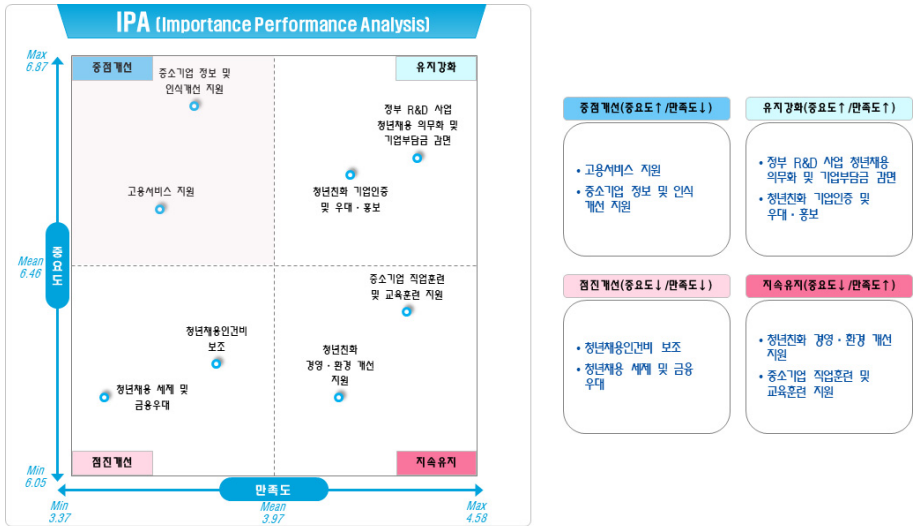


그림 VI-3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충남)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충청남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70)'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60)', '문화 및 체육 인프라(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53)', '근무시설 최신화(4.50)', '교육환경(4.33)',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13)', '보육인프라(4.0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3.87)', '정주를 위한 주거(3.83)', '교통의 접근성 제고(3.83)'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7.37)', '교통의 접근성 제고(7.3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27)', '교육환경(7.23)', '문화 및 체육 인프라(7.0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87)', '근무시설 최신화(6.70)', '보육인프라(6.60)',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57)', '정주를 위한 주거(6.50)'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00과 4.2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1]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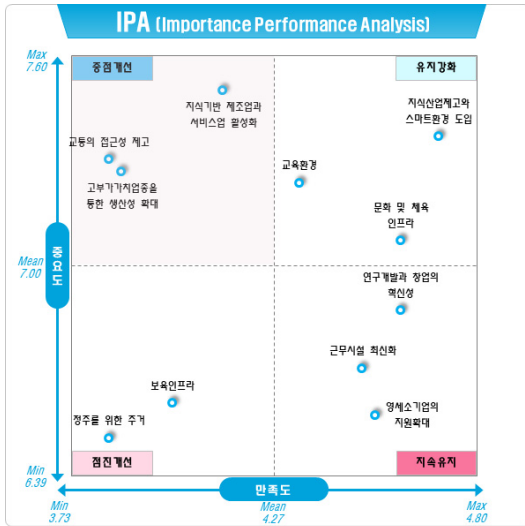
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교육환경',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충남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환경조성과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정책이 청년층의 정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지역 역점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환경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교육·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교통의 접근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이는 충남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정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또는 지역 외 대도시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인프라가 청년층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나 타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는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청년 임대주택 확대, 지역 내 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주거·보육 복합지원 등 관련 정책을 검토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산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내 기업들의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과 기업지원정책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기업 지원, 산·학·연을 연계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체계 강화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충청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며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교통의 접근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첨단소재·에너지·스마트제조 분야 중심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고용의 접근성 제고</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li> <li>교육환경</li> <li>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주를 위한 주거</li> <li>보육인프라</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시설 최선화</li> <li>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ul> |

그림 VI-3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충남)

### (13) 전북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전라북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서비스 지원(4.7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67)’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50)’,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4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4.00)’,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97)’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4.03)’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90)’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7.3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7.20)’,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7.07)’, ‘고용서비스 지원(7.03)’,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0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7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6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60)’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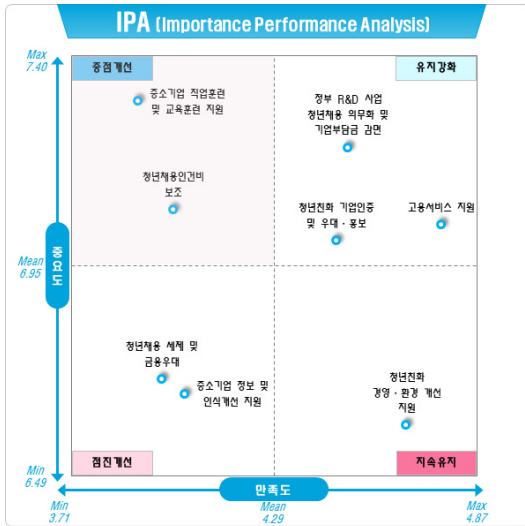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95와 4.29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2]와 같다. 먼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유지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 ‘고용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전북은 농생명, 기계·소재, 에너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청년 인력의 기술 기반 일자리 진입을 위한 R&D 연계형 채용제도 및 산업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청년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더불어 단순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정책의 효과, 체감도 또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훈련 강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인건비 지원과 연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와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해당된다. 즉, 전북의 경우 금융지원 중심의 단기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 고용친화형 세제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의 기업지원정책이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전라북도는 농생명,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청년고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 강화, 인건비 보조제도의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 인건비 보조는 초기 고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낮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춘 성과연동형 인건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채용인건비 보조</li> <li>• 중소기업 직원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고면</li> <li>• 정년채용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li>• 고용서비스 지원</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 우대</li> <li>•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 개선 지원</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채용 경영·환경 개선 지원</li> </ul>   |

그림 VI-3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북)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전라북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83)’,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83)’, ‘근무시설 최신화(4.77)’, ‘교육환경(4.7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70)’,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63)’, ‘보육인프라(4.30)’, ‘정주를 위한 주거(4.20)’, ‘문화 및 체육 인프라(4.13)’, ‘교통의 접근성 제고(3.9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통의 접근성 제고(7.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 및 체육 인프라(7.40)’,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7.33)’,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27)’, ‘교육환경(7.10)’,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93)’, ‘정주를 위한 주거(6.8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80)’, ‘보육인프라(6.73)’,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63)’, ‘근무시설 최신화(6.60)’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02와 4.55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3]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육환경’이 포함되었다. 이는

전북이 그간 추진해온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재편 및 청년 R&D 역량 강화정책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기술창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하며, 청년 연구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R&D 중심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도시 간 교통망 부족과 생활·여가 인프라의 수도권 대비 열세가 청년층의 정주 매력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광역 교통 접근성 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육아 지원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청년 임대주택 확충 및 보육시설 접근성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주거·보육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가 포함되었다. 이는 전북 내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근무환경 고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청년 근속 지원 및 일자리 품질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하면, 전라북도는 청년층의 정주 유인을 위해 교통 접근성과 문화·여가 인프라의 부족의 해결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철도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단순한 시설 확장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률과 체감 만족도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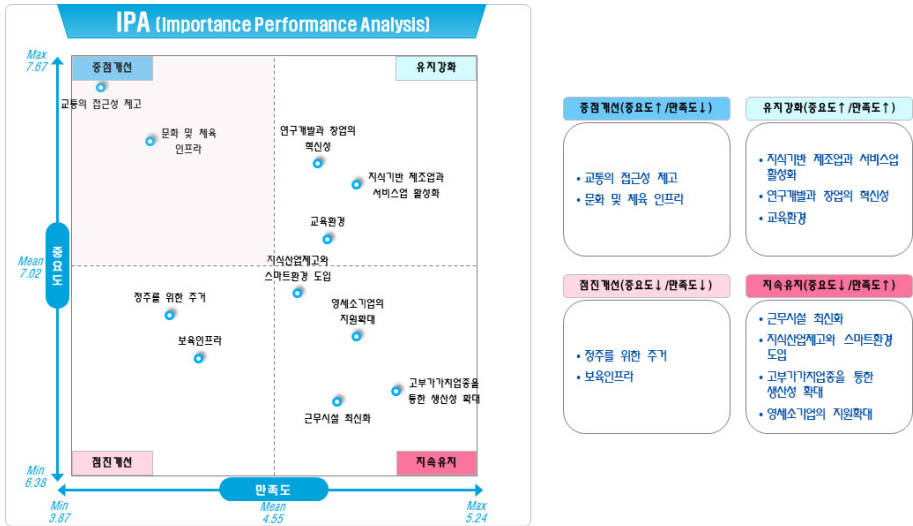


그림 VI-33.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전북)

#### (14) 전남

#####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전라남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고용서비스 지원(4.83)’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40)’,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37)’,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7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67)’,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3.43)’,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50)’,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2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90)’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어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80)’,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83)’,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73)’, ‘고용서비스 지원(6.53)’,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27)’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17)’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59와 3.89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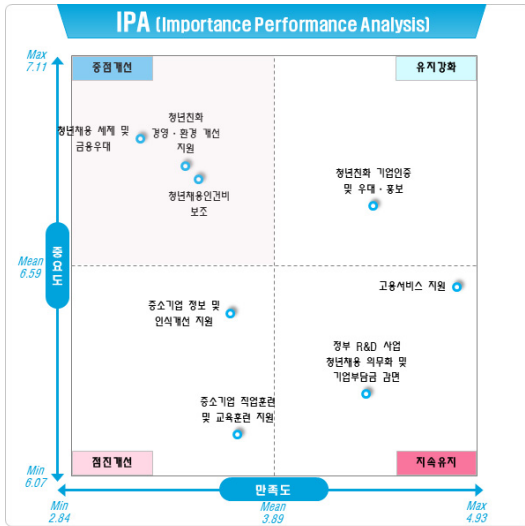
결과는 [그림 VI-34]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인력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남은 청년친화기업 우수사례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포함되었다. 즉, 기업관점에서 재정 지원의 중요도는 높으나 정책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 방식은 단순 인건비 및 세제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적 고용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조선·기계, 농생명 산업 등 전남의 핵심 산업군 중심으로 청년기술인력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산업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노력과 청년층의 직무역량 제고 프로그램(산업맞춤 교육과정, 기업현장 연계형 인턴십 등)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기업과 청년 인력의 매칭을 촉진하고, 고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전라남도도 전통적인 중화학, 농생명 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 위에, 최근 해상 풍력·수소 등 에너지와 같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정책을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근속과 기술인력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이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 개선 컨설팅과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채용인건비 보조</li> <li>• 청년채용 세계 및 금융 우대</li> <li>• 청년진화 경영·환경 개선 지원</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진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 개선 지원</li> <li>•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li> <li>• 고용서비스 지원</li> </ul> |

그림 VI-34.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전남)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전라남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교육환경(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80)',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7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7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70)', '보육인프라(4.17)', '근무시설 최신화(4.13)', '정주를 위한 주거(4.0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07)', '문화 및 체육 인프라(3.90)', '교통의 접근성 제고(3.77)'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문화 및 체육 인프라(7.7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60)', '근무시설 최신화(7.57)',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53)', '교통의 접근성 제고(7.50)', '정주를 위한 주거(7.2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7.1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7.17)', '보육인프라(7.20)',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7.07)', '교육환경(7.03)'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35와 4.3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5]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이는

전남의 중화학공업·에너지 중심 산업구조가 일정 수준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기존 중화학 산업 내에서도 정밀화학, 첨단 소재,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전환과 더불어 지식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헌’, ‘교통의 접근성 제고’,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환경과 정주 여건 및 생활 인프라의 미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광역 교통망 확충 및 근로자의 교통편의성 증진,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 ‘정주를 위한 주거’,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지역 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 환경 도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 친화형 임대주택, 보육시설 연계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육환경’이 포함되었다. 이들 정책은 당장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라남도도 중화학 공업·에너지 중심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교통 접근성과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이 청년층 유입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도 근무환경 개선과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 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중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산업 기반의 융합형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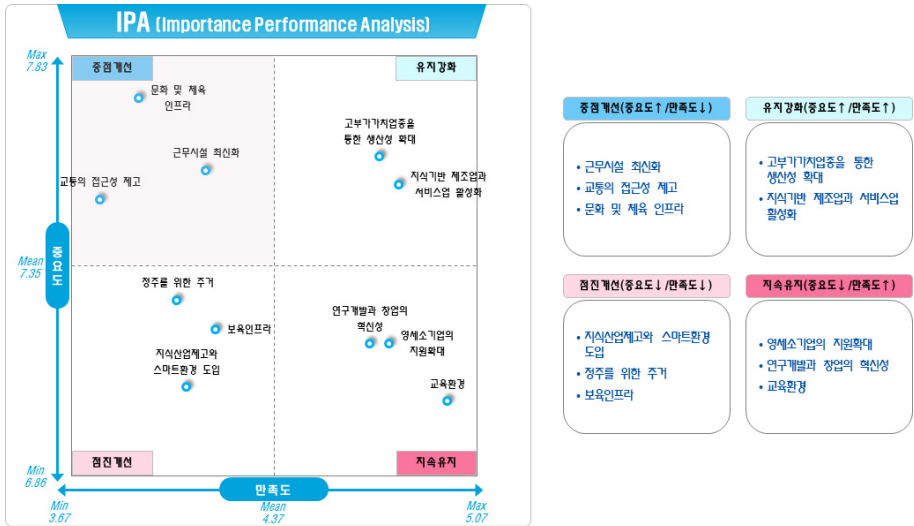


그림 VI-35.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전남)

(15) 경북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경상북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4.90)’와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90)’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7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4.43)’,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0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73)’, ‘고용서비스 지원(3.6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7.17)’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고용서비스 지원(7.03)’,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00)’,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97)’,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87)’,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5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27)’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81과 4.20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6]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해당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해당한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북은 청년층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근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역 청년 등을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은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포함되었다. 즉, 경북의 경우 기업들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나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단기 고용 효과는 있을지라도, 청년층의 장기고용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건비 보조에 따른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또는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되었다. 두 항목은 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청년고용 유지형 인건비 지원 모델과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철강, 기계, 반도체, 전자산업 등 제조 기반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산업(원전 및 수소)으로 신산업을 육성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의 청년고용을 위한 기업지원정책은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 기반 맞춤형 직무훈련 강화, 청년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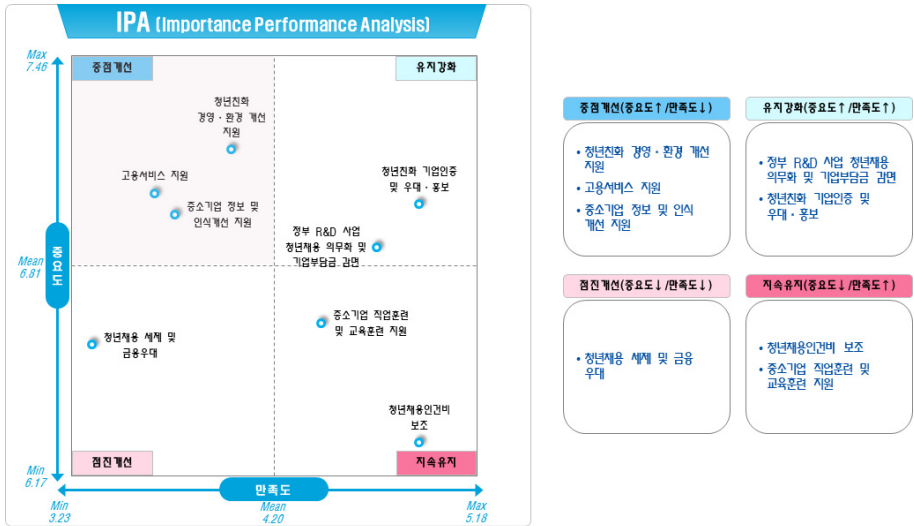


그림 VI-3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북)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경상북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9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70)', '근무시설 최신화(4.67)', '교육환경(4.6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53)',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53)', '문화 및 체육 인프라(4.17)', '교통의 접근성 제고(4.10)', '정주를 위한 주거(4.03)', '보육인프라(3.70)'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육환경(8.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 인프라(7.93)', '근무시설 최신화(7.90)', '교통의 접근성 제고(7.40)',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7.3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7.27)', '보육인프라(6.87)', '정주를 위한 주거(6.77)',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6.7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5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03)'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18과 4.46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7]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산업제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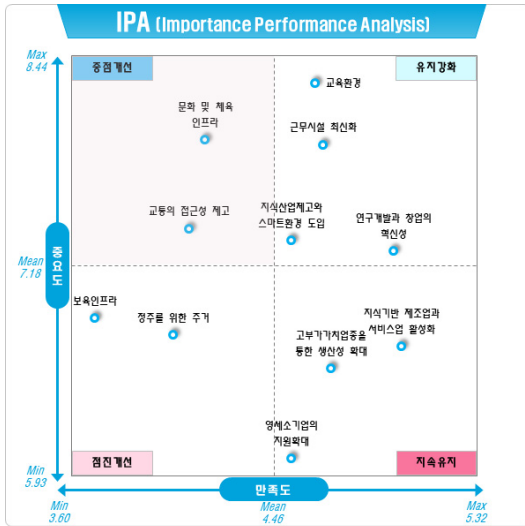
스마트환경 도입',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육환경'이 포함되었다. 이는 경북이 전통 제조 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북은 기존 주력산업의 첨단기술 도입과 근무환경 개선, 신산업 중심의 R&D 및 산학연 연계형 청년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북이 청년인재를 지역에 유치·정착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지역 내에서 장기 정착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므로 향후 경북은 청년 전용 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기존 제조업 중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청년 고용 인센티브 등의 지원정책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IPA 분석결과의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의 개선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경북은 대중교통망 확충과 함께 생활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산업의 고도화, R&D 및 산학연 연계형 청년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의 접근성 제고</li> <li>문의 및 체육 인프라</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시설 개선화</li> <li>지식산업체고과 스마트환경 도입</li> <li>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li>교육환경</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주를 위한 주거</li> <li>보육인프라</li> </ul>        | <b>지속유지(중요도↓/만족도↑)</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직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li> <li>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ul>     |

그림 VI-37.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북)

(16) 경남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경상남도의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5.27)’, ‘고용서비스 지원(4.87)’,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4.7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70)’,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33)’,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4.13)’,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4.03)’,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3.9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7.33)’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7.27)’,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7.1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7.03)’,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93)’, ‘고용서비스 지원(6.60)’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5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33)’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90과 4.50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8]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가 포함되었다. 경남의 제조업·조선업 등의 기업에서는 인건비 지원과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실제 청년고용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은 청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및 산업별 직업훈련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가 해당한다. 이는 재정지원 방식 중 인건비 보조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이는 즉 기업입장에서는 청년고용시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세제지원은 직접적인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과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들 정책은 경남의 신산업(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산 등)분야에서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바 R&D 연계형 채용제도 및 고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유지가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는 제조업(조선, 기계)과 첨단 산업(우주항공, 자동차 등)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숙련 청년인력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기업지원정책은 기술 인력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친화 기업환경 조성, 직무중심형 인력양성 체계 강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년친화적 고용문화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정지원방식의 경우 인건비 보조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간접적 재정지원인 세제 혜택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재정지원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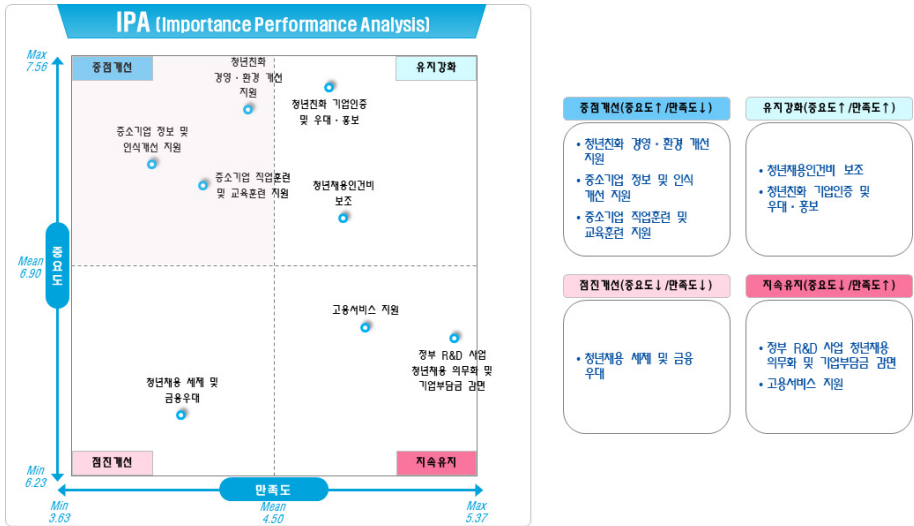


그림 VI-38.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경남)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경상남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교통의 접근성 제고(4.9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정주를 위한 주거(4.80)',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63)', '교육환경(4.60)', '문화 및 체육 인프라(4.4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40)', '보육인프라(4.0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0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3.9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3.83)', '근무시설 최신화(3.33)'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교통의 접근성 제고(7.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7.70)', '문화 및 체육 인프라(7.63)', '근무시설 최신화(7.53)',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7.4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7.37)',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30)', '보육인프라(7.10)', '정주를 위한 주거(7.03)',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6.63)', '교육환경(6.60)'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28과 4.27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9]와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 '교통의 접근성 제고',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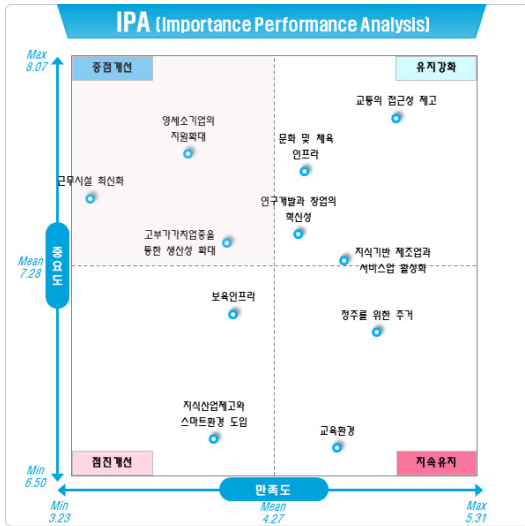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경남이 이들 정책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식 기반 제조업 고도화 및 R&D 생태계 조성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 문화 인프라 등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가 포함되었다. 이는 경남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남은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직무 중심의 산업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층의 장기근속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과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내 산업이 첨단기술 도입 및 스마트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남은 스마트 제조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정주를 위한 주거'와 '교육환경'이 해당한다. 이는 경남의 주거 및 교육 기반이 청년층의 정주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남은 직주근접형 생활 인프라 조성과, 전문직·기술직 청년 인력의 정착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하면, 경상남도는 기계·조선·항공 중심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며 미래 모빌리티, 방산,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의 정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고도화, 생활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R&D 중심 청년 창업 및 기술 일자리 창출 확대, 광역 교통망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여가 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  |
|--|--|
| <b>중점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무시설 최신화</li> <li>•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 영세소기업의 지원 확대</li> </ul> | <b>유지 강화(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li>• 교육의 접근성 제고</li> <li>• 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 <b>점진 개선(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체고과 스마트환경 도입</li> <li>• 보육인프라</li> </ul>                              | <b>지속 유지(중요도↓/만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를 위한 주거</li> <li>• 교육환경</li> </ul>  |

그림 VI-39.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경남)

(17) 제주

가. 기업지원정책 IPA 분석결과

청년고용 관련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4.67)’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4.50)’,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4.33)’,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4.1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3.60)’,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3.47)’, ‘고용서비스 지원(3.43)’,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3.4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 ‘고용서비스 지원(7.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6.87)’,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6.87)’,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6.77)’,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6.70)’,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6.50)’,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6.47)’,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6.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6.68과 3.95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40]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정부 R&D

사업 청년채용 의무화 및 기업부담금 감면, '청년친화 기업인증 및 우대·홍보', '중소기업 정보 및 인식개선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중심의 청년고용 프로그램과 청년친화기업 홍보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인건비 보조'와 '고용서비스 지원'이 해당된다. 이는 제주 지역 소재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용매칭 및 현장 중심의 고용지원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별·직무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 보조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채용 세제 및 금융우대'와 '중소기업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지원'이 포함되었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질 제고 등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청년친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근로자의 복지·근무환경 개선이 청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며, 향후 제주는 청년친화기업의 인센티브 및 복지지원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서비스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아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여건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지원정책은 관광·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고용서비스 체계 강화 및 산업맞춤형 직업훈련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 내 중소기업을 안정적 일자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중심의 단기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청년고용 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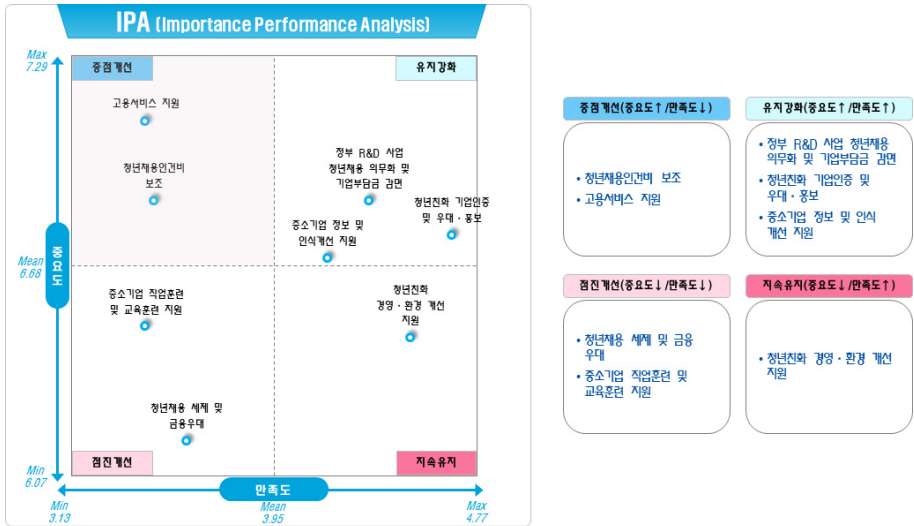


그림 VI-40.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유형 IPA(제주)

#### 나.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 분석 결과, ‘근무시설 최신화(4.9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4.90)’,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4.80)’,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4.77)’, ‘정주를 위한 주거(4.6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4.53)’, ‘교육환경(4.4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4.20)’, ‘교통의 접근성 제고(4.03)’, ‘문화 및 체육 인프라(3.83)’, ‘보육인프라(3.80)’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 ‘근무시설 최신화(7.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7.67)’, ‘교통의 접근성 제고(7.63)’, ‘문화 및 체육 인프라(7.60)’, ‘교육환경(7.50)’, ‘정주를 위한 주거(7.37)’,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6.97)’,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7.03)’, ‘보육인프라(6.87)’,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6.47)’,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6.40)’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7.22와 4.45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41]과 같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근무시설 최신화’,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정주를 위한 주거’, ‘교육환경’이 해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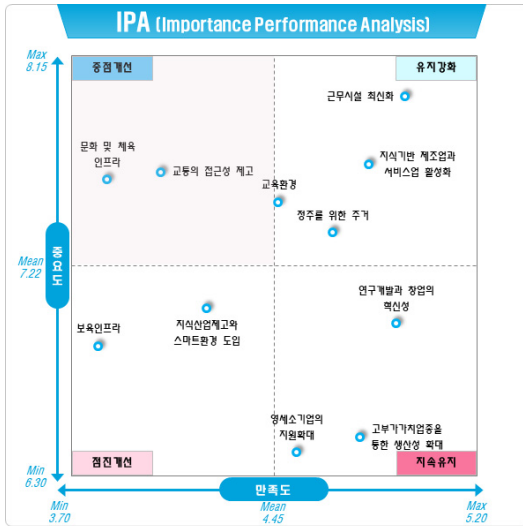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근무환경의 현대화 및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교육 인프라 개선정책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교통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 내 교통 인프라의 제약과 문화·여가 시설의 낮은 만족도가 청년층의 지역 내 정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식산업제고와 스마트환경 도입’과 ‘보육인프라’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의 시급성은 낮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관광, 농업 등의 기존 주력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정책지원과 청년층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보육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ICT·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창업의 자립성과 고용 연계성을 높이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농업 등 기존 주력 산업에 ICT 융합을 확대하여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첨단서비스·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 중이며, 청년층의 근무환경과 정주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통과 문화 인프라의 한계가 청년들의 정주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교통 및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질 개선 등을 시급히 추진함과 동시에 근무환경을 현대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



- |   |   |
|---|---|
| <p><b>중점개선(중요도↑/만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의 접근성 제고</li> <li>• 문화 및 체육 인프라</li> </ul> | <p><b>유지강화(중요도↑/만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설 최신화</li> <li>•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li> <li>• 장주를 위한 주거</li> <li>• 교육환경</li> </ul> |
| <p><b>점진개선(중요도↓/만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체고학 스마트환경 도입</li> <li>• 보육인프라</li> </ul> | <p><b>지속유지(중요도↓/만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업종을 통한 생산성 확대</li> <li>• 영세소기업의 지원확대</li> <li>• 연구개발과 창업의 혁신성</li> </ul>          |

그림 VI-41. 청년유인력 지수 재구성 요인 IPA(제주)

---

## 참고문헌

---

- 고운숙, 이영민. (2024).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5(4), 173-195.
- 김태운, 박선주. (2019).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1), 1-31.
- 김태환. (2022). 청년고용 촉진 중소기업 지원정책 요구 분석: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용이슈**, 74-89.
- 김형돈. (2024). Gilbert 와 Specht 의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고용정책 분석. **지속가능경영연구학회지**, 8(1), 17-31.
-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4), 133-159.
- 박종훈, 이경재. (2018). 지역별 노동시장 산업구조분석을 통한 청년층 고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425-452.
- 송영남. (2017). 전북지역의 청년고용정책과 개선 방향. **지방행정**, 66(769), 14-17.
- 양대정. (2018). 광주·전남지역의 청년고용 부진원인 및 대응방향. **한국지역경제연구**, 16(1), 17-42.
- 유일, 김선명. (201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 산업 구조 및 고용 시장 분석과 정책대안 탐색: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 101-128.
- 이상아, 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27-59.
-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태형, 윤성원. (2023).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3, 1-20.

- 임광현, & 이동진. (2009). 전라북도 청년층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평가.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89-114.
- 최용환, 곽창규, 이성규. (2020).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20-03).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최용환, 김강배, 장선희, 조예진. (2018). 2018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최종결과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김영한, 권오영, 박윤수, 오문준. (202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연구보고 24-일반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2023).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연구보고 23-수탁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성우. (2012). 청년일자리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례. **지역개발연구**, 44(1), 1-24.
- 황덕순, 주진우, 최봉. (2016).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319.

Gobillon, L., & Magnac, T. (2016). Regional policy evaluation: Interactive fixed effects and synthetic control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8(3), 535-551.

O'Reilly, J., Eichhorst, W., Gábos, A., Hadjivassiliou, K., Lain, D., Leschke, J., McGuinness, S., Kureková, L., Nazio, T., Ortlieb, R., Russell, H. & Villa, P. (2015). Five characteristics of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Flexibility, education, migration, family legacies, and EU policy. *Sage Open*, 5(1), 2158244015574962.

####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통계(2022). <https://laborstat.moel.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 고용노동통계(2023) <https://laborstat.moel.go.kr/>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 고용노동통계 (2024). <https://laborstat.moel.go.kr/>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 고용행정통계 (2024).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고용행정통계 (2025) <https://eis.work24.go.kr/>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고용행정통계. [https://eis.work24.go.kr](https://eis.work24.go.kr/) 에서 2025년 5월 12일 인출  
온통청년. [https://www.youthcenter.go.kr](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2025년 월 일 인출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 에서 2025년 4월  
23일 인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에 추진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산업별로 종합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획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이 시도의 활력과 신성장 동력마련,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에 대한 개선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 단순한 고용유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용에 대한 2차 통계자료, 각 시도의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용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output)와 효과성(outcome)을 정성적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와 고용행정통계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시도별 청년고용 현황을 2차 통계통계자료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사이트에 게시된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는 분석기준에 따라 광역시도의 청년고용정책 효과성을 서면평가형식으로 정성평가하였다. 이어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맞춤형 미래산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diagno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previously implemented reg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by industry and, based on this analysis, to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s to regional future industry strategies. The goal is to ensure that future reg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contribute to the vitality of provinces, th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 mitigation of population decline. In particular, as youth employment policies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industries, this study goes beyond simple employment inducement analysis. It integrates regional youth policy master plans a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secondary employment statistics, and policy data from each province to qualitatively analyz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outputs, and outcomes of employment polic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youth employment by region using secondary statistical data from employment labor statistics and employment administrative statistic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ddition, it utilizes data from youth employment policies posted on the “on-tong” platform opera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s well as related policy materials implemented by each province, to evaluate reg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across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analysis applies evaluation criteria categorized into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performance, and conducts a descriptiv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at the metropolitan level.

Furthermore,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and to establish strategic direc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industry-specific policy outcomes and tailored future industry strategies for regional youth employment policies across the 17 provinces.



##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승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운수·이동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세성·김다은·홍서아

##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 수 탁 과 제

### < 일 반 >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연
-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 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시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 자료 집

### < 세미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 워크숍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 포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 기타 자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칙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칙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연적금03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인 쇄 2025년 12월 31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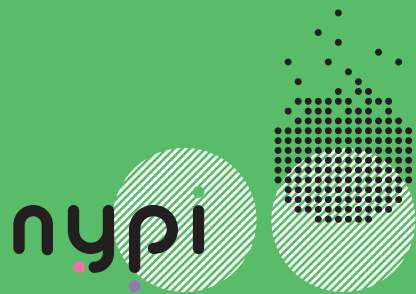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70-8

연구보고25-연적금03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70-8